

아쉬세븐 '미공개 정보' 도 흘렸다

일부 조합원에게 공시 전 '센트럴인사이트 인수 사실' 미리 알려 "몇몇만 아는 호재 있다" 다른 조합원 통해 지분 매수 권유하기도

아쉬세븐 측 아무런 해명도 없어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아쉬세븐이 센트럴인사이트 경영권 인수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19면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쉬세븐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사진)에서 "공지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아쉬세븐이 코스피 상장기업 센트럴인사이트 인수계약을 30일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공시는 오늘 오후나 월요일 공시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2020년 12월 31일 11시 29분.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가 나간 시점은 같은 날 오후 4시 11분이다.

센트럴인사이트는 정정 공시에서 200억 원 규모 제3차 배정유상증자 대상자가 우림개발에서 아쉬세븐 외 2인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가 완료될 경우 아쉬세븐은 센트럴인사이트 주식 239만여 주를 취득해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상황이었다. 아쉬세븐은 올해 1월 26일 센트럴인사이트 최대 주주가 됐다. 해당 유상증자는 기존 200억 원 규모에서 145억 원으로 정정됐고, 아쉬세븐은 이 중 120억 원을 납입했다. 아쉬세븐은 납입 직전 일부 지점을 통해 50~100% 수익을 준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중요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다. 문자 메시지 발신인 A 씨는 아쉬세븐 지점장급 인물이다. 본지는 해당 정보 전



파 경위를 묻기 위해 A 씨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확인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아쉬세븐 조합원들은 이후에도 다른 조합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센트럴인사이트 지분 매수를 권유받았다. 한 취재원은 "(다른 조합원은) '몇 명 모른다'는 식으로 호재가 있다며 센트럴인사이트 주식을 사라고 했다"며 "(아쉬세븐) 간부 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센트럴인사이트 주가는 아쉬세븐 인수 전날인 1월 25일 주당 1만1250원을 고점으로, 2개월 만인 3월 29일 2105원으로 81.28% 급락했다. 이 기간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투자자가 104억 원 손매수했지만, 기타법인은 106억 원 손매도했다. 기타법인이 팔아치우며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매도 물량을 대부분 받아낸 것이다. 센트럴인사이트는 감사의견 '거절'로 3월 31일부터 주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아쉬세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 회사 대표 번호를 통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기영 기자 pgy@
이난희 수습기자 nancho0907@
이민재 수습기자 2mj@

스페셜 리포트 ▶3면
주택공약 쏟아내는 대선주자



대세론 굳힌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민주당 경선레이스 '1차 슈퍼워크'에서 51% 득표로 압승해 대세론을 굳혔다. 이 지사가 대회장을 떠나며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연한뉴스

〈5년간 2720명〉
한 해 544명
서울시 공무원
스스로 짐쌌다

472, 464, 629, 560, 59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표를 낸 서울시 소속 공무원 숫자다. 스스로 '철밥통'을 깬 것이다. 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만큼 조직문화에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 사회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일 이투데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집계한 결과 5년간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수는 2720명에 이른다. 평균 544명이 서울시를 떠난 셈이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이 사의(辭意)를 표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사표를 내고 공무원을 그만둔다는 의미다.

연봉이나 복지 등 더 나은 처우를 쫓기도 하지만 공직을 떠난 이들은 '조직문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19면에 계속
홍인석 기자 mystic@

'연 2% 금리 토스통장' 요구불예금 폭리 관행 깨나

다음 달 공식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의 '연 2% 금리 통장' 상품이 관행처럼 굳어진 금리 0%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12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연 2% 금리 통장에 43만 명이 넘는 사전 신청자가 몰렸다. 10일 상품 출시 이후 3일 만이다.

토스뱅크가 출시한 상품은 가입 기간, 예치 금액 등을 제한 없이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사전 예약 기간이지만, 신청자가 대거 몰린 이유는 높은 금리 때문이다. 수시

3일 만에 사전신청 43만명 넘어 은행 측 "결국 고객에 비용 전가"

입출금 통장은 고객에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이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장점이지만, 금리가 연 0.1% 내외로 낮아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전 '대기성 자금' 성격이 짙었다.

은행들은 그동안 요구불예금 이자는 최대한 낮추면서 대출이자 높이는 정

책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토스뱅크가 연 2% 고금리 수시입출금 통장을 내놓으면서 0%대에 그쳤던 요구불예금 관행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 통장은 정기예금, 적금 등과 비교해도 금리가 월등히 높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1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와 적금 금리는 각각 0%대와 1%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운영비용과 예대마진을 최소화해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 주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1면에 계속 김범근 기자 nova@

67 With Green
YEARS



탄소와 싸우는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 금융지원, KDB산업은행이 함께 합니다

KDB탄소스프레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탄소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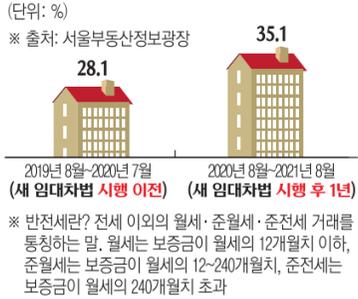
총 운용규모 5조원 이내 금리우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최대 연1.0%p, 한도 소진 시까지)

(8월)

전셋값 감당못해 월세로... 서울 임대차 40%가 '반전세'

보증금 인상률 5%로 제한한 새 임대차법에 '월세화 가속' 1년간 반전세 비중 7%p 늘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반전세 비중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총 1만2567건 가운데 월세를 일부 포함한 계약은 39.4%(4954건)로 집계됐다. 전월(35.5%·7월)보다 3.9%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개월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로 나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흔히 반전세로 통칭하는 월세·준월세·준전세의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도입한 이후 급증했다.

새 임대차 법 시행 후 1년간(지난해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18만 5273건 중 6만5088건)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2019년 8월~작년 7월·19만 6374건 중 5만5215건)에 비해 7.0%p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이 비율은 1~3월 33.7~35.5%에서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 등으로 40%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p 증가했고, 송파구가 33.8%에서 46.2%로 늘었다.

강남권 다음으로는 마포·용산·강동구에서 반전세 비중이 증가했다. 마포구는 7월 40.0%에서 8월 52.2%로 한달 새 12.2%p 증가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이 반전세 거래로 나타났다. 구로구(31.6%→

46.5%), 은평구(33.8%→45.1%) 등 서울 외곽 지역과 도심 지역인 중구(48.4%→47.2%)도 이 비율이 40%를 웃돌았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임대료도 함께 오르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45건 중 월세를 낀 거래가 21건(46.7%)에 달했다.

이단지 전용면적 84㎡형은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50만 원(15층·27층)에 이뤄져 1년 새 월세가 100만 원가량 올랐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래미안1단지 59㎡형은 지난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썼다. 지난해 6월 보증금 1억4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월세가 두 배가량 뛰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 모두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기점으로 계약갱신 만료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전·월세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주택공급 턱없이 부족... 2~3년 후 집값 하락”

KDI '부동산 포럼'

현재 고평가된 주택가격이 앞으로 2~3년은 지나야 떨어질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사실상 집값 상승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9일 국제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 부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인허가·분양·준공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표들이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기존 주택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서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증가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을 꼽았다.

그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분석은 '주택 가격이 현재 고점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39.4%를 차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에 있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격 매수를 경고한 정부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앞서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가격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당부한 바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비사

업 물량 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정비사업 역제로 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낭비적 통근 비용을 추정한 결과다.

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안은 정비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기업 10곳 중 4곳 '상여금 없는 추석'

작년보다 '지급' 1.1%p 감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44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1.8

%로, 작년(62.9%)보다 1.1%p 감소했다고 밝혔다.

추석 상여금 지급 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95.0%로 가장 높았다. '작년보다 적게 지급'은 1.9%, '작년보다 많이 지급'은 3.1%로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 기업(30.1%)이 300인 이상 기업(5.3%)보다 25%p 가까이 높았다.

추석 경기상황에 대해선 응답 기업 중 47.3%는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악화했다'는 응답은 38.6%, '개선됐다'는 응답은 14%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추석 경기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30.6%)이 300인 미만 기업(11.0%)보다 19.6%p 높게 나타났다. 악화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41.3%)이 300인 이상(24.7%)보다 월등히 높았다. 노우리 기자 we1228@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가 수소도 만듭니다

- 수소 생산기지: 전국 총 25개소 구축
- 수소 연료전지: 500MW 발전소 건설
- 수소 충전소: 전국 총 132개소 구축
- 해의 그린수소 도입: 2040년까지 총 12만톤 수입
- 수소 핵심기술 확보: 총 1,600억원 투자

Everywhere Green Life.
H2 KOGAS

‘기본·원가 주택’ 약속한 대선후보들… 현실성은 ‘글썸’

시장 불안 ‘불쏘시개’ 우려

여야 대선 주요 예비 후보들은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자원 마련과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 많아 사실상 공염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 후보 공약에도 부동산 시장 기능을 무시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약이 많아 부동산 시장 안정은 커녕 불안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각 대선 경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 대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확인됐다. 여야 모두 공통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수백만 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여야 지지율 1위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통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주택공급 핵심정책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야당 대표주자인 윤 전 총장은 ‘원가주택’으로 맞불을 냈다. 임기 5년 동안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반값 주택’·‘반의반 값 주택’ 등 실현 가능성 낮은 대책 우후죽순

임대주택 공급 등 공약은 실종 특정지역 개발 언급 혼란 가중

원가주택은 정부가 직접 건설한 주택을 청년층 대상으로 원가로 공급하는 개념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에는 공공에 되팔 수 있으며, 가격 상승분의 70%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 대기물량의 30%를 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 일대에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최대 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 수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분양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공급’ 외쳐= 다른 대선 주자도 여야 구분 없이 공급 정책 경쟁에 나섰다. 후보자들은 지지율 경쟁을 의식한 듯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급 방안을 내놓으며 민심을 흔들었다. 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도심 내 학교 부지를 재개발해 6층 이상부터 주택으로 공급하는 ‘학품아’ (학교 품은 아파트) 공급안을 내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한 뒤 7만 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김포공항을 옮긴 뒤 20만 가구를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기본주택 100만 가구 등
 -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 이낙연**
 - 성남 공항 이전 후 7만 가구 공급
- 정세균**
 - 도심 학교부지 재개발해 주택 공급
 - 임기 내 280만 가구 공급

여야 대선 후보 주요 부동산 공약

- 윤석열**
 - 임기 내 수도권 130만 가구 포함 총 250만 가구 공급
 - 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주택’ 20만 가구 등
- 홍준표**
 -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 규제 완화 후
 - 아파트 평균값의 4분의 1 수준 아파트 (쿼터아파트) 공급
- 최재형**
 -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해 민간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반값 주택’ 공급

국민의힘



짓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반값은 물론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 안까지 등장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신 조합의 기부채납을 받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쿼터 아파트’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와 개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갖는 ‘반반 주택’ 개념을 선보였다.

◇주거약자 위한 정책은 ‘빈약’=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공급 일반도 정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만으로도 집값 급등과 전세난이 계속되는 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같은 진영 내에서도 공약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도 포착된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내놓은 원가주택 공약을 두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모두 민간 또는 공공 등 방식의 차이일 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서울 강북 재개발이나 공항 이전 등 특정 지역 개발 공약을 언급하는 것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로 작용해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정책 등은 여야 모두 공약에 포함되지 않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욱 기자 dragon@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

규제 더 강화하겠다는 與 주자

26차례 부동산 정책 힘 못썼는데 토지 공개념 3법·세제 강화 시사

내년 치러질 대선에 나선 여권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을 통해 차기 정부 집권 시 차기 정부 집권 시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규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에도 차기 여권 대선주자들은 오히려 ‘더 센’ 부동산 규제를 시사한 셈이다. 설령 공약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규제 강화 신호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권 주요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 시행을 약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주요 규제 공약으로 토지공개념과 세제 강화를 내걸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 이용은 공공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두 정책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정부가 시행 중 중단했다.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 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안을 내놨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과 과세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이런 여권 대선 공약이 실현되지 않고, 단지 규제 강화 신호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26차례 크고 작은 규제 강화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조율에 실패했다.

부동산대책 대부분은 주택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강화책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대책 발표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부동산 규제 강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자 지난해부터 2030 세대의 아파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매수와 수도권 전세난만 심화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7월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2016년 10월 3억 원을 돌파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올랐다. 최근 1년 만에 중위가격은 1억 원이 올랐고, 임기 전체 기간으로 보면 2억 원 이상 급등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평균 가격은 6억4000만 원에서 11억40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매맷값이 오르자 전셋값도 덩달아 뛰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3억554만 원으로 3억 원을 넘겼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여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규제 공약은 다주택자를 규제로 두들기면 물량을 내놓을 거라는 믿음이 강하다”며 “하지만 기존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는 증여를 하거나 서울 내 ‘뽕뽕한 한 채’를 보유하는 전략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오히려 더 강한 규제 시행은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

바람이 말합니다

지금의 순풍이
삼시간에 폭풍우로 변할 수 있다고

디지털 자산 투자도
풍문에 휩쓸리지 말고
기술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나침을 경계하세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투자하세요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가 함께 실천합니다

美·中 정상 전화회담에 기대감 ‘글로벌 투심’ 반색

갈등 완화 등 90분간 논의 애플 증시·MSCI 지수 상승 위안화 3개월 만에 최고치 전문가 “구체적 진전 필요”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전화회담을 했다 는 소식에 글로벌 시장은 출렁거렸다. 위안화와 아시아증시가 오르는 등 시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문가들은 더 구체적인 관계 진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달러당 중국 위안화 가치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0.3% 상승한 6.4375위안까지 치솟으면서 6월 16일 이후 3개월 만의 최고치로 마감했다.

일본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아증시도 10일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 변동 추이



달러·위안 환율 추이



는 1.25% 상승했고 홍콩 항셱지수는 1.82% 올랐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역시 0.27% 상승했다. 전 세계 증시 벤치마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월드인덱스 역시 아시아증시 강세에 힘입어 0.3% 상승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 같은 상승장은 줄곧 냉전 기류를 보이던 미·중 양국 정상이 모처럼 대화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이다. 앞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회담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이자 7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90분에 걸친 통화에서 미·중 갈등과 하나의 중국 원칙,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후 백악관은 “두 정상이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양국의 이익이 수렴하는 영역과 가치, 관점이 나누는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해당 이슈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직접적

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주하오 이코노미스트는 “양국 대화는 단기적으로 투자 위험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에 장기적인 변화를 주기엔 이번 소식이 주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싱가포르 말라야은행의 안시 탄 외환 전략가는 “눈에 띄는 정책적 전환 없이는 시장의 추가 진전은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

(BoA)의 클라우드오 파이론 외환 애널리스트는 “중국 외환시장의 평온함은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투자은행 나타시스의 개리 응 이코노미스트 역시 “두 정상의 전화 회담 후 시장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었다”며 “시장은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백악관의 발표와 달리 통화 내용이 너무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친분이 있다고 자랑하곤 했지만, 그건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중국과의 관계가 끊기던 때의 이야기”라며 “이번에 두 정상이 대화했지만, 향후 회담 일정도 전해지지 않아 보고할 만한 건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신고기한 D-7’ 코인거래소 59곳 줄폐업 우려

은행, 실명계좌 여전히 꺼리고 금융위는 은행 면책요구 거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생사결정이 일주일 남았다.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마감 일은 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가 가장 활발한 빅4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최근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24일까지 요건을 채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확보다. 금융위가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63개 중 ISMS 인증 요건 하나만 달성한 거래소는 21개 사, ISMS와 은행 실명 계좌 요건을 모두 달성한 거래소는 4개 사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거래만 중개할 수 있는 코인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원화, 달러 등과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원화마켓은 ISMS에 은행 실명 계좌 인증까지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빅4 거래소를 제외한 59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다. 거래소는 사업자신고를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고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은행이 거래소와의 협약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이 우려하는 점은 협약을 맺은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거래가 일어났을 때 불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협약을 맺은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아 달라는 안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이라며 “(실명 계좌를 내줄지 말지)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의 면책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는 앞서 9일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책’ 포럼에서 4대 거래소의 중소형 거래소가 모두 문을 닫을 경우 투자자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김 교수는 “코인마켓캡(가상자산 시장 사이트)에 오른 김치 코인은 159개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건 99개”라며 “나머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은 3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금융위가 350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 계좌를 발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112건을 차단했으며,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520명을 검거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빅테크 플랫폼 규제 칼날 겨누자 네이버 ‘예의주시’ 카카오 ‘긴장’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 플랫폼이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가능성에 포위됐다. 입법과 제도권 편입 등 다양한 규제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가 중소형 플랫폼 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다 우려가 커지면서 스타트업계 등은 불안하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 내 감독당국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단속에 속속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10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도 언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공정위 진정·신고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

지면 플랫폼 기업이 입점사에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금융당국도 빅테크·핀테크 금융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권 편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계약내역을 관리하고, 계약 절차도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은 25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 운영하게 했다.

정부의 단속 움직임이 거세지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빅테크 양사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의 칼날이 빗겨간 네이버의 경우 상황을 예의 주시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

는 금소법 관련 규제에 대해 “사례 중 아직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없다”며 “향후 법이나 규제를 지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을 중단하

공정위·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온플법 입법·제도권 편입 제시 카카오 ‘협력사와 상생 노력’ IT업계 “플랫폼 규제 과하다”

지 총 세 번 접수됐다. 택시 단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안내한 거리순이 아닌 카카오 가맹택시에 먼저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4월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올해 초부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을 법적 규제에 틀어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국내외 대형 플랫폼에 의무를 부여하고 ‘갑질’을 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징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발의안을

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 논의의 중심에 선 카카오 내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카카오 측은 “시장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상생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IT업계에서는 당장의 플랫폼 관련 규제책이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스타트업에까지 규제 부과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 우려도 제시됐다. 10일 민주당 윤지호위원장은 부동산 플랫폼 ‘직방’,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과 이들과 갈등 중인 이익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면서다. 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스타트업은 대응 능력이 없을 수 있다”며 “스타트업에게 ‘성장하라’는 말 대신 해외로 법인을 옮기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17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인 모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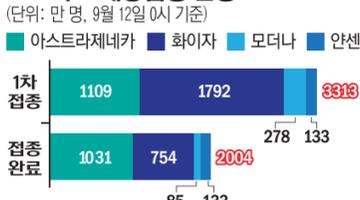
2주간 추석 방역대책 시행 지원금 오늘 오프라인 신청

13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17일부터는 지역과 상관없이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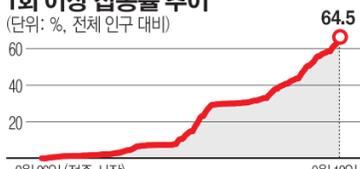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1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약 시 요양병원·시설의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미접촉면회만 허용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7~23일에는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기존대로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가정 내 가족모임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1회 이상 접종률 추이



한 사적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까지 6일간 온라인 신청으로 2886만2000명에게 총 7조2155억 원이 지급됐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잠정) 2320만 가구 4326만 명의 66.7%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

청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이주 중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1차 이상 누적 접종인원은 3313만333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64.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접종 완료율은 39.0%다. 일평균 1차 접종자가 50만 명씩만 유지되면, 접종률은 토요일(발표 기준 일요일) 70%를 넘게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변수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55명으로 집계했다. 토요일(발표기준 일요일)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새 128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으며, 경남권·충청권에 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권 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방역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따라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느냐, 안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공수처 “공무집행 방해죄 검토” 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 고발”

‘김용 의원실 압수수색’ 저지한 野, 공수처장 절차상 위법 신고 공수처 “약속대로 수사 협력하라”...檢, 손준성 수사 착수할 듯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용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12일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0일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주요사건관계인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

러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상 대기했다.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굳이 검찰총장을 적시하며 정보수집 운운한 배경과 이유는 알 수 없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의원의 PC에 입력한 ‘오수’라는 키워드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윤 전 총장 배우자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의 이름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키워드도 고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공수처의 김용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 입증자료 등에 첨부된 자료에 등장하는 이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공수처가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고지 절차, 범위 등에도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일말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적 의혹이 제

기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제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견해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만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영장을 토대로 한 압수수색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도 이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김 총장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검 검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초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대검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를 넘겼다. 대검 검찰3과는 손 전 정책관 등 현직 검사 관련 부분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청년 싱크탱크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윤석열(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CU 라운지에서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캠프 “박지원 게이트”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과 접촉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제기 與 “황당한 물타기...尹 사퇴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12일 고발사주 의혹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박지원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야당이 ‘박지원 개입설’을 내세워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여당은 ‘황당한 물타기’라고 맞섰다.

윤 전 총장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지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13일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野 “박지원 게이트” 박 원장 해임해야 = 국민의힘은 박 원장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조성은 씨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시점인 7월 21일 이후인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원장이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은 박 국정원장과 조 씨의 만남에 대해 “국정원장이라는 직분을 고려할 때 평소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팀이) 김오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관계자를 지칭한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제 처가 무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에 관여한 것 같이 발표했다”며 “수사 기관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명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 그동안 여권은 김경수 드루킹 선거 여론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등으로 재미를 봤다”며 “조 씨가 왜 제보 후에 박 원장을 만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공적 자금으로 (식사) 비용 지출했다면 비용 지출 자료를 국회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원장이 조 씨를 만난 것은) 대선 개입이라는 국정원의 구태를 반복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설명했다.

◇與 “국정원장 끌어들이 황당한 물타기” = ‘국정원 개입’이라는 야당 역공에 여당은 ‘황당한 물타기’라고 맞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이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일련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강원 합동 연설회에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윤석열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한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자산관리는 역시 주파수 웰스!

금융상품 전용
(채권/펀드/달러RP 등)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SK증권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EL 1599-8245
 (2021.5.24~2022.5.16)

이재명, 국민선거인단 51% 얻어 대세론 굳혔다

경선 분수령 '1차 슈퍼워크' 누적 득표율 51%...이낙연 31%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 가능성 당원 가장 많은 호남이 막판 변수

더불어민주당 순회경선 누적 집계 결과 (단위: %)

누적 득표율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대구·경북 (9월 11일)	51.12	27.98	14.84	3.6
강원 (9월 12일)	55.36	27.00	8.61	6.39
1차 선거인단 (9월 12일)	51.09	31.45	11.67	4.03

64만 명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 손을 들어주며 견고한 대세론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된 1차 슈퍼워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지역 순회 경선 4연승은 물론,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한 것이다. 이로써 이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확률을 보다 높게 됐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3시 30분 강원 원주시 오코벨리조트에서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6시에는 강원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강원 지역 경선은 선거인단 규모가 총 1만6293명이다. 관건은 강원 경선과 함께 발표하는 64만 명 규모의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인 가운데, 1위는 이재명 후보가 차지했다. 이 후보는 강원 지역 대선 경선에서 5048표, 55.36%의 득표율로 전날에 이어 과반을 유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462표, 27.0%로 2위를 기록했다. 1차 슈퍼워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09%로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낙연 후보는 31.45%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추미애 후보가 11.67%로 3위를 기록했다. 누적집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1.41%로 2위 이낙연 후보(31.08%)와의 표차를 더

벌렸다.

전체 선거인단 규모가 약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4만 명의 표심이 그간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려온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과반을 저지하지 못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배수진도 실기했다. 충청권 개표를 하기 전에 사퇴해야 했다"며 "이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할 때 1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이미 25%를 넘는 시점이었다. 사퇴수를 보기도 전에 이미 투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순으로 지역 순회 경선(대의원·권리당원)을 실시한다. 인천에서 2차 슈퍼워크 결과도 발표된다. 이후 10월 9일 경기, 10일 서울 경선이 예정돼 있다. 10일 3차 슈퍼워크 결과와 함께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후 결선이 치러진다. 이번 1차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사퇴 및 후보들 간 합종연횡이 이

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며 판도는 요동칠 수 있다. 특히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호남 표심도 주목된다.

엄 소장은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가 40%의 투표율을 얻으며 체면치레해주는 정도로 호남 표심이 전략적 선택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의 과제에 대해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적 이미지를 재소환하지 않고, 레임덕 없는 문재인정부와 싸우지 않는다면 대선론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원사이드(일방적으로 승부가 결정된 게임) 결과 나오는 상황이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기에 때문에 전략적 투표에 능한 호남이 이낙연 후보에 '마음 편하게' 투표해 많은 표심이 쏠린다면 본선에 갈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정미 정의당 경선 후보 "상·하위 임금 격차 30% 내로 줄일 것"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정미(사진) 전 대표가 12일 "산업별·업종별 교섭을 법제화해 대통령 임기 내에 상·하위 임금 격차를 30%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정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비정규직, 짧은 근속 기간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 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임금 격차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성별 임금분포 공시제도, 학력별 임금분포 공시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근속 기간별 임금 격차의 주원인이 되는 호봉제도 완화하겠다.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임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상·하위 임금 격차를 30%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업의 책임과 함께 노동간의 연대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위 10%의 임금 상승은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하위 50% 임금을 비약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홍준표 "유신에 막혀 개그맨 시험 못 봤죠" 유승민 "아쉬움 컸어요" 박근혜에 영상편지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유튜브 토크쇼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교수가 "정치판 오니 사소한 거 말 한마디로도 꼬투리가 잡힌다. 120시간·부정식품·쩍벌남·기타, 어떤 게 가장 억울하나"고 묻자 윤 전 총장은 '부정식품'을 꼽았다. 그는 "불량식품은 유해 식품이고 부정식품은 정부가 규제할 선 아래를 의미한다"며 "정부가 규제를 너무 높이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맞추려다 보면 그들도 힘들고 하니 불필요하게 과다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에게 수석처럼 따라다니는 '배신자 프레임'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서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영상편지를 요구하자 유 전 의원은 "정당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선인 2006~2007년, 당시 다들 이 후보에게 줄 설 때 난 박 후보를 도왔다"며 "아쉬운 건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주변을 에워쌌던 최순실 씨, 진박(진실한 진박근혜계) 의원들이 들 말 듣지 말고 저 같은 사람 말 귀 기울여 주시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회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 강하게 옳은 길 갈 수 있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미소 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12일 경선 일정이 '올데이 라방(라이브방송)'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앞서 '국민 시그널 면접'은 후보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후보자 개인의 일화나 강점을 묻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홍준표 의원은 과거 개그맨 시험에 응시할 뻔한 일화를 공개했다. 홍 의원은 "김경태 피디(PD)가 고려대 법대 선배다. 당시 신입생 환영회 때 (대학생 1학년들에게) 말을 한 번씩 시켜보더니 저를 보면서 '11월에 MBC 개그맨을 뽑는다. 거기에 나와라'라고 하더라. 그런데 10월 유신으로 시골에 올라온 학생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진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소위 MZ세대와 제가 가진 캐릭터가 우연히 맞아떨어지면서 폭발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과거 논란이 됐던



폭염, 폭우, 한파, 먼지 아이들에게 기후변화는 고통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힘든 에너지빈곤가정 127만가구

1588-1940 에너지빈곤가정(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www.cherim.or.kr 기후변화대응사업(에너지빈곤가정 지원사업) 신청은 이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 가입

지구에게 100점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가 RE100에 참여합니다

사용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하는 친환경적인 노력으로

반도체 기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고민을 아끼지 않는

ESG경영 실천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전 3.3조·코레일 1조...공기업 15곳 올 6.7조 적자

2021~2025 재무관리계획...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
‘자본잠식’ 석탄·석유·광물공 5년간 이자 2.8조 전망

올해 한국전력 등 15개 공기업이 6조 7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향후 5년간 이자만 2조8000억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은 올해 총 6조6787억 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3조 3993억 원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26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적자라는 얘기다.

올해 적자를 예상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우선 한전은 지난해 1조9515억 원의 흑자에서 올해 3조2677억 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력원자력과 남동·남부

15개 공기업·공공기관 올해 예상 적자 규모 (단위: 억 원)

한국전력공사	3조2677	한국서부발전	1151
한국철도공사	1조1779	대한석탄공사	992
인천국제공항공사	8320	한국동서발전	691
한국석유공사	3418	한국광물자원공사	489
한국남동발전	2158	인천항만공사	312
한국남부발전	2100	한국수력원자력	186
한국중부발전	1289	한국산업단지공단	1
국민체육진흥공단	1224		

* 출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부·서부·동서발전 등 6개 한전 자회사는 지난해 3329억 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올해는 7575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이 크게 나빠진 이유는 전력 생산의 원료인 원유와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올해 급등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투자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한국철도는 올해 1조 1779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해 1조3427억 원 적자보다 규모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유지된다.

인천공항공사도 코로나19로 지난해 4229억 원 적자에서 올해 832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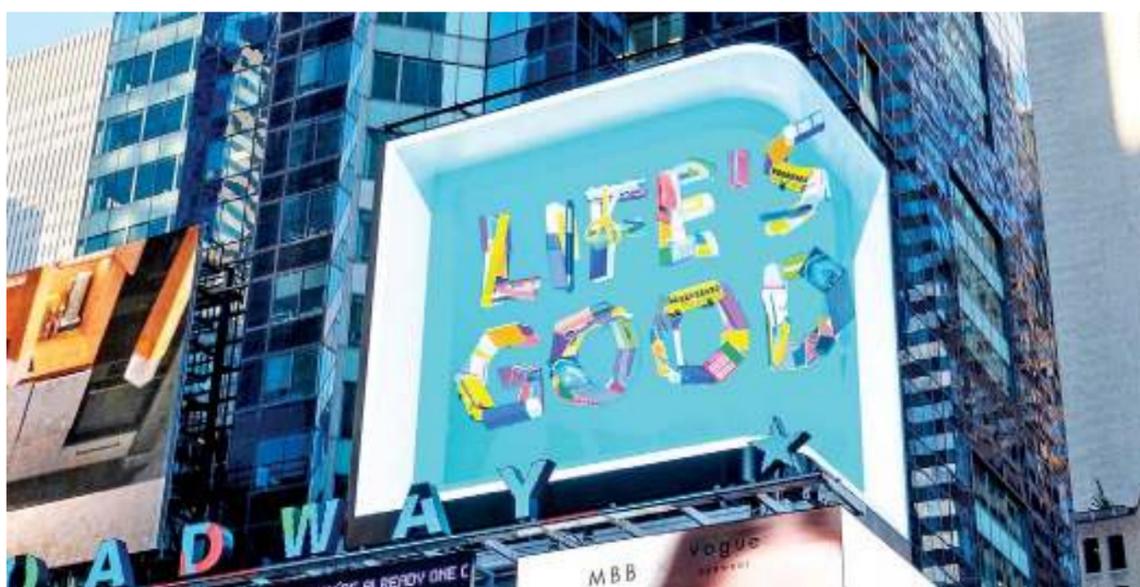
지난해 유가 하락 등 여파로 2조4392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자본이 잠식됐던 석유공사는 올해도 341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공사 등 3곳은 2025년에 이자

비용만 2조8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는 5년간 2조 원,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각각 6500억 원, 1800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3개 기업은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저유가, 탄소중립 정책 확대, 석탄산업 쇠퇴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 축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연계, 결산검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LG전자, 뉴욕 타임스스퀘어 '3D 영상'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라이프 이즈 굿(Life's Good)' 메시지를 담은 3D 영상 콘텐츠를 선보였다. 개학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영상은 내달 초까지 상영한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가지 학용품이 '라이프 이즈 굿' 문구를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LG전자는 3D 콘텐츠를 시리즈로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LG전자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LG생전에 과징금

공정위, 3억 부과·시정 명령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에게 500억 원에 가까운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LG생전건강(LG생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회를 맞았다.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생전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500명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LG생전과 가맹점주가 각각 70%, 30%의 비율로, 그 외 50% 미만 할인과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절반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LG생전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시행한 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중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할인행사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

용에다가 LG생전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가맹점주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예측 가능성 높여야”

상의 “기업들 배출권 매매 혼란”
美·유럽 수준 가격 안정화 촉구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급등락이 반복되면,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과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용 중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

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1톤당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 2500원까지 상승했다. 올해 6월 기준 다시 1만 원대 중반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정부는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흡했다.

대한상가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이나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EU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장에 나오는

배출권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 범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EU의 시장 안정화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 경쟁 가열에 따른 가격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10월께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브리 기자 kimstar1215@

추석 이후 전기·가스료 인상 무게

올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동결
한전 손실·가스공 미수금 눈덩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2분기 연속 동결한 전기요금이 4분기에는 인상될 것인 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연료비 인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3일께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했으나 4분기에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2분기 연속 동결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만큼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안의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다만 한전은 최근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코로나19로 내년 이후에나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면 조정한다.

올해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 원 정도로 알려졌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20대 10명 중 6명 “청년 일자리 더 악화”

청년 연장, 청년 고용 악영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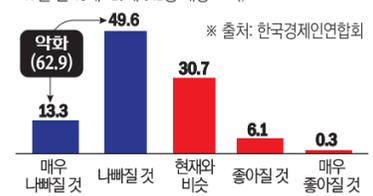
청년 10명 중 6명이 앞으로 일자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 18세~29세 응답자의 62.9%는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 응답자의 65.2%는 ‘평생직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희망하는 은퇴 시기는 61세~65세가 3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6세~60세가 26.3%였고 만 66세 이상에 은퇴하고 싶다는 답변도 19.7%에 달했다. 청년 중 63.9%는 청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

청년연장을 해야 한다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고용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답변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 (단위: %, 모노리서치가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8월 4~17일 만 18세~29세 542명 대상 조사)



이 33.6%에 달했다. 그 뒤로 임금피크제 도입 27.0%,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호봉제 폐지) 22.0%, 연금 수급 나이 상향 17.2% 등 순이다.

추광호 환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들의 부정적인 일자리 인식은 청년 구직단념·자양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브리 기자 kimstar1215@

원유 자급 가능해진 美 중동 중재자役 손 떴나

세일혁명 후 교역조건 개선
군사·외교 개입 약화될 수도
고유가 지속뎀 韓에 악영향

미국의 무역이 고유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향후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한층 더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2일 일본 니혼게이아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세일 혁명을 통해 원유 수출국으로 전환된 이후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됐다. 한 국가의 원재료 수입 비용과 수출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교역 조건은 수출물가를 수입물가로 나눈 산출한다.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수출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국가 전체에서 무역을 통한 벌이가 커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유가는 배럴당 약 70달러 안팎으로 전년 대비 90%나 급등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교역조건은 1이 넘는다. 이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로 지금과 비슷했던 2007년 8월 미국의 교역조건이 0.96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고유가는 휘발유 등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미국의 교역 조건 약화로 직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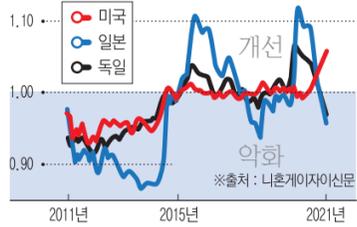
이처럼 미국의 교역조건이 구조적 변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유 수입이 지난 10년 동안 급감했기 때문이다. 세일 혁명으로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유를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유가가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2011년에 미국의 석유 수입량은 하루 1144만 배럴이었으며, 당시 무역수지는 약 55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석유 관련 적자가 약 3260억 달러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반면 순수출로 돌아선 지난해 석유 관련 무역수지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추이
(단위: 배럴당 달러) ※ 현지시간 증가 기준



세계 주요국 교역조건 추이
※ 2015년 1로 자수화, 기준 1 넘으면 개선



140억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교역조건 개선은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과거 고유가는 경상수지 적자를 일으켜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년 동안 유가가 2배 이상 급등했을 때 경상 적자가 부풀어 올라 미국 달러 실효 환율이 20%가량 떨어졌다. 그리고 달러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고유가로 멎는 가계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고 경기를 위축시켰다.

미국이 원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면 중동의 정세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은 9·11테러 20년을 맞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 데 이어 향후 중동 등 이슬람권에 대한 미국의 군사·외교적 관여가 한층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에 있어서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평가다. 중동에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중동에서 에너지 수입을 의지해 온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9·11 사태’ 20주년 “연대” 강조한 지도자들

서구 정상 “테러, 민주주의 파괴 못해” 한목소리… 트럼프 “바보·무능” 바이든 비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전 세계 지도자들이 9·11테러 20주기를 맞아 일제히 ‘유대와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와 달리 추모식 장소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바보’, ‘무능’ 등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맹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2001년 9·11테러 당시 현직에 있었던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 사회의 분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단결과 단합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9·11 테러 발생 이후 우리는 도처에서 영웅적 면모를 봤고, 국가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며 “단결이야말로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점을 배웠다. 우리를 미국인답게 만드는 말이자, 미국이 최고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최대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생크빌의 93여객기 추락 추모행사에 참석해 “테러 발생 이후 재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갖고, 단합되고 굳건한 미국 국민을 이끌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다”며 “하지만 미국 결속의 측면에서 그 시절은 아주 먼 옛날의 일이 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 바이든(앞줄 왼쪽 5번째)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뉴욕의 옛 세계무역센터(WTC) 자리인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20주년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시험대에 올랐던 시련과 슬픔의 날, 수백만 국민은 본능적으로 이웃의 손을 잡고 결집했다. 이것이 내가 아는 미국의 모습”이라며 “우리는 그랬고, 다시 또 그때처럼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연합(EU)·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서구 지도자들과 정상들도 테러리즘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맞서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트윗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테러리스트들은 지난 20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신념을 흔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마

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어떠한 추모식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바보’에 빗대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비판한 데 이어,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 지역의 뉴욕 제17 구역 경찰서에서도 “엄청난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선 기자 hsbun@



슈퍼태풍 ‘찬투’ 대만 강타

올해 제14호 태풍이자 5등급으로 분류된 슈퍼태풍 ‘찬투’가 12일 대만에 상륙했다. 태풍으로 인해 대만 항공과 열차 등 교통편 운행이 일제히 중단됐다. 찬투는 대만과 중국 상하이를 거치면서 북상, 이르면 14일이나 15일께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릉사에서 스쿠터를 탄 두 사람이 강풍과 폭우를 헤치면서 나아가고 있다. 기릉/EPA연합뉴스

스가 퇴임에 外人 귀환… 日증시 폭포

닛케이 지수, 올해 최고치 근접

일본증시가 지난주 고공행진을 벌였다. 신임을 잃어가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자 시장은 폭포를 썼다. 특히 외국인의 귀환이 일본증시 랠리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5% 상승한 3만381.84에 마감, 2월 기록했던 올해 최고치 기록에 근접했다. 토PIX지수는 1.29% 상승해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서 3일 스가 총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총리직 사임 수순으로, 차기 총리가 펼칠 개혁 정책에 대한 기대로 시장은 상승 랠리를 펼쳤다. 스가 총리 지지율은 도쿄올림픽 폐막 후 곤두박질치면서 그간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올해 도쿄증권거래소 1부 종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액은 3일 기준 약 1조4000억 엔(약 14조8998억 원)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컸던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순매도세를 보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일본 시장에서 지난해에만 3조3000억 엔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JP모건체이스의 사카가미 료타 수석 투자 전략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대체로 낮았지만, 이제 상당 수준의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린 시장에서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대니얼 모리스 수석 애널리스트 역시 “이미 여러 포트폴리오에서 일본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최근 변화는 포트폴리오 배분에 있어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9일 기준 일본 전체 인구의 49.8%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으며 1회 이상 접종 비율도 61.9%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스가 총리가 당내 1위를 차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던 가을 총선은 이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며 “투자자들은 총선 이후 여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까지 받게 되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 민주당 ‘車 빅3’ 전기차 세금 공제 확대

GM·포드 등에 추가 공제 제안… 14일 하원서 표결

미국 민주당이 자동차 ‘빅3’ 기업에 대한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혜택을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관련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인데, 특정 기업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인 스텔란티스 등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대표하는 이른바 디트로이트 빅3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의회에 제안했다.

존 킬디 하원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을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세금 공제를 강력하게 고집했다”며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하길 바라고 있고, 그래

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차량당 최대 1만2500달러(약 1462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던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20만 대 판매 후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규정은 철회하기로 했다. 킬디 의원은 해당 공제가 향후 10년에 걸쳐 330억~340억 달러의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일부 전기차 가격은 3분의 1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CNBC는 민주당의 제안이 노조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목표로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킬디 의원 역시 “10년 이내에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산

전기차를 만들어 좋은 임금을 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UAW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혼다는 성명을 통해 “우리 의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노동자가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새로운 공제 혜택이 소비자의 개별 소득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가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새로운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차량 가격도 5만5000달러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제안을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공동부유” 시진핑 장기집권 야욕에 “공동빈곤 나락” 우려

3연임 도전 앞두고 '토지분배·기업 국유화' 마오 시절 회귀
기업·교육 '울며 겨자 먹기' 기부행렬... 시장실패 상실 경고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가와 유명인들은 조국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수십억 달러를 내놓는 등 공산당 눈치 보기 바쁘다. 중국 안팎에선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대혁명이 부활하는 정치 대격변의 시작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꼽힌다. 그런 그도 처음부터 문화대혁명에 대한 환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문화혁명 이전 1세대 공산당 원로였던 그의 아버지 시중선은 1962년 류스단 사건 이후 공산당의 박해를 받았고, 시 주석 역시 수백만 명의 다른 10대들과 함께 시골로 보내지는 고초를 겪은 탓이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부터 사교육 탄압, 미성년자 게임 규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시 주석은 민간 부문과 시

민의 일상적 생활에서 당을 우선순위로 다시 놓고 있다. FT는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시대를 연 이후로 볼 수 없던 방식”이라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은 당국의 규제 단속을 ‘심오한 혁명’이라고 지칭한 프리랜서 작가 리광만의 글을 최근 일제히 게재하며 벌써 시 주석의 행보를 찬양하기 바쁘다. 리광만은 “중국에서 기념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본주의 파벌에서 인민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혁명 정신과 영웅심, 정의로의 회귀”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사실상 제2의 문화대혁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화대혁명과 시 주석의 행보가 다른 점은 현 중국이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오는 시 주석의 누리는 것 이상의 개인 권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만, 실제 행정권은 당 기구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마오가 젊은 홍위병을 앞에 두고 문화혁명을 벌인 이유



라고 FT는 꼬집었다. 반면 시 주석 1인의 행정권 장악은 마오보다 훨씬 강하다.

‘공동부유’를 내세운 시 주석의 정책은 여전히 마오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공동부유는 과세와 자발적 기부, 균등한 자재 공급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꾀하려는 시 주석 체제의 전략이다.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 주석의 공동부유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민영기업을 당에 귀속시켰던 마오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 주석이 지난달 17일 공동부유를 발표한 지 불과 26시간 만에 중국 대표 기술기업 텐센트가 500억 위안(약 9조 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7월엔 중국 교육당국이 사립학교를 공립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2만 명 학생을 보유한 허난성의 한 사립교가 “모든 것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당국의 칭찬을 듣기도 했다. 공동부유 정책이 요구하는 기부는 자발적 행위에 기반을 두지만, 당국이 “고수입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불벌 수익은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울며 겨자 먹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6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들의 뇌리에서 잊힌 조직인 공소합작총사가 인민은행 등과 공동으로 농촌 신용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사업모델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해당 모델이 실현되면 1958년 농업 집단화를 위해 공산당이 만들었던 집단농장인 ‘인민공사’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고 닷케이는 지적했다.

일련의 정책이 시 주석의 3연임 도전에 앞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뒤따른다.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는 얼마 전 ‘경제 50인 논단(CE50)’ 기고를 통해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가 빈번히 개입하면 ‘공동빈곤’이 될 것”이라며 기업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FT는 “시 주석은 내년 유례없는 3연임을 준비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며 “하지만 개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 주석은 마오 시대에 있던 후진적인 선전 도구와 협박 전술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대영 기자 kodae0@

‘21세기 홍위병’ 육성하는 ‘문화대혁명 2.0’

당이 원하는 사회주의 인재육성 목표... 교육·게임·아이돌 외모까지 규제 나서

“초·중등 의무교육 과정의 학과에 대한 영리 목적 사교육 금지.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일주일 3시간으로 제한. ‘여성스러운 외모의 남자 아이돌’ 활동 금지”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십 년간 볼 수 없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파고들려는 의도를 점점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당국은 사교육, 대중문화 아이돌, 그리고 온라인 게임까지 단속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러

한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임자들이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 ‘공산당의 정치 독점을 목인하는 대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일종의 사회 계약이 있었지만, 현재 그런 계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으며, 그들이 유해하다고 간주하는 업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생의 압박을 가중시키는 사교육 △유명인

팬덤의 건강하지 못한 문화를 조성한다고 당국이 주장하는 대중문화 산업 △국영 미디어가 ‘정신의 아편’이라고 명명한 게임산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전임자들이 묵시적으로 지켜왔던 사회 계약을 깨면서 공격적으로 산업 단속에 나선 이유에 대해 차세대 중국 국민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공산당의 의도가 있다고 WSJ는 풀이했다. 일상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한 규제와 단속

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청년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청소년 육성은 ‘남자다운 소년’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요약된다.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정신을 쫓먹고,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며, 소년의 남자다움을 빼앗는 문화가 아이들 주변에 넘쳐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젠더에 집착하지 않는 성 중립 스타일의 남성 셀럽들이 중국 청년들의 ‘남자다움’ 부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는 움직임은 비단 오락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국 당국은 7월 영리 목적의 교육 서비스 산업에 대해 엄격한 제한

을 가했다. 그동안 학원 등과 같은 교육 서비스는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아이를 우위에 두고 싶은 부모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사교육 탄압 의도는 주말이나 방과 후에 학습 지도를 받게 할 여유가 없는 가정에 불공평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균형 잡힌 아이’를 만들려는 목적도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 시 주석의 말을 빌리자면 ‘도덕·지식·스포츠·예술·노동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바로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1세기 홍위병’을 육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1577호

노량진 1재 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규정에 의거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장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 사업구역면적 : 132,132㎡ (대지면적 : 106,125㎡)
- 건축규모 : 지하4층 ~ 지상33층(건축면적 : 27,641.278㎡ / 연면적 : 480,455.051㎡)
- 사업시행자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내용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기간 : 2021년 9월 13일(월) ~ 10월 18일(월) [21일간(토,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820-9813), 노량진1동주민센터(☎815-1164), 노량진2동 주민센터(☎812-0903), 상도2동주민센터(☎814-3755), 대방동주민센터(☎820-2996),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823-5566)

* 전자공람 :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eims.seoul.go.kr/>)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년 9월 27일(월) 10:30
- 장 소 : CTS 2층 베라카채플웨딩(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로 참석인원에 따라 집합인원에 제한을 두어 당일 회차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음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시기 및 장소 : 공람기간 만료 시까지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및 각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또는 우편제출 (단, 우편 접수시 기한 내 발송분만 유효)
- 제출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 오염 피해 및 저감방안 등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개발과(☎820-9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잠잠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잠잠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잠잠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손태승 회장 중징계 취소소〉

금감원 'DLF 항소' 딜레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주장 간 첫 행정소송 사례이기 때문에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 항소 시 법정공방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항소 절차에 접어들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한다 해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사실심인 1심·2심에서 패해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이 항소할 경우 손 회장은 다시 중징계 제재의 효력을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1심 때도 손 회장은 징계 효력 정지 가져본 신청을 했다.

항소할 경우 법정공방 장기화 부담 다른 금융사 징계 결정도 어려워져

항소 포기 땀 '금융검찰' 위상 타격 "피해 소비자 외면" 질타 받을 수도

정 원장의 부담은 대법원까지 가면 사모펀드 관련한 징계안을 보류 상태로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 소송건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감원과 손 회장의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른 금융회사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반면 항소를 포기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사모펀드 관련 금융회사와 해당 임직원에게 한 제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조정하면 된다.

문제는 금감원의 감독당국으로서 위신은 떨어지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더이상 금융회사의 잘못을 논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시장 안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해 '금융 검찰'로 불린다.

지난 7월 감사원 자료를 보면 DLF에 연관된 투자자(일반+전문)는 3243명으로 투자금액은 7950억 원이다. 이 중 일반투자자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3004명(1억 이상~5억 원 미만 2780명)에 이른다. 지난 2019년 금감원이 공개한 DLF 관련 중간 감사관련 자료를 보면 2개 은행, 3개 증권사, 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손 회장 승소로 징계 취소 소송이 끝난다면 금감원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불복 사례가 늘 수 있다. 무엇보다 DLF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지고,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책임을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전히 패소했어도 항소해야 한다"며 "대법원까지 가면 긴 싸움이 될 것이란 걸 알지만 항소라는 절차가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대부분 금감원 직원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은 어떤 사안을 보든지 '책임'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정 원장의 고민은 깊을 것"이라며 "항소하면 법정 공방이 길어질 테고, 항소를 포기하면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주택연금 지급액 4년 새 2배 '급등한 집값' 걸림돌 될 수도

계약 줄고 해지 건수 늘어

주택연금 지급액 추이



주택노후연금 지급액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택을 통한 노후대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급등한 집값이 주택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조20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지급액인 6176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94.5%나 늘어난 수치다.

주택연금은 자기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한 노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급금은 계약 당시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진다"면서 "누적 가입이 늘어난 만큼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집값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집값 대비 달달 받는 연금액수가 적다고 판단한 이들이 주택연금을 해지하며, 지난해 해지 건수는 3826건으로 전년 대비 67% 급증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수령 방식을 다양화하며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가입 시 결정된 총연금액(연금 대출한도)을 평생 동일하게 나눠 받을 것인지, 혹은 가입 초기에 많이 받을지, 후반에 많이 받을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수령 방식에 정액형은 유지하되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정액형'과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새로 추가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수은 임직원 '단체 헌혈' 동참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정부의 헌혈 요청에 동참했다. 12일 수은에 따르면 방문규(오른쪽) 행정과 임직원들은 국가 혈액 수급 개선에 일조하기 위해 9~10일 이틀에 걸쳐 헌혈 버스로 단체 헌혈을 했다. 수은 관계자는 "혈액 수급 상황이 주의 단계에 진입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며 "국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선제적 책임 이행을 다해 혈액 수급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연 2% 금리 토스통장' 인기몰이

▶1면서 계속

기존 관행을 깬다는 기대와 달리 시중은행들의 시각은 굽지 않다. 고객 확보를 위해 무리한 조건을 내건 만큼 장기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개시를 앞두고 공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2% 금리 수시입출금

통장'을 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장금리를 고려했을 경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 금리가 장기화하면 결국 고객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대마진을 일부 포기하고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가상화폐 계좌'와 '26주 적금' 같은 킬러 콘텐츠를 내놓은 바 있다.

www.douzone.com
DOUZONE

큰 미래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준비하세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아마란스10이 답입니다

기업의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시간을 가치 있게 소비하며 언제, 어디서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

융합
기술/물류/인/데이터의 융합으로 사·지·장 통합

연결
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를 통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

공유
하나의 플랫폼에서 업무 데이터를 관리하게 공유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회계관리
HR
Groupware(UC)
임직원 업무관리
CRM
문서 관리

반도체·폴더블 앞세운 삼성, 3분기 최대 매출 '청신호'

매출액 8% 증가한 72.3兆 추정
영업익 작년보다 25% 증가 전망

D램 가격 하락 등 우려에도
4분기 실적 3분기 웃돌듯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폴더블 스마트폰의 흥행에 힘입어 3분기에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메모리 가격 하락 우려와 애플·샤오미 등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스마트폰 경쟁 심화로 4분기 실적 방어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액 72조3200억 원, 영업이익 15조45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 25%, 전 분기 대비로는 각각 14%, 23%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예고하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15조 원을 돌파하며 2018년 1분기(15조6400억



원), 3분기(17조57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10조 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는 신규 CPU 채용 확대와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견조한 서버와 모바일 수요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스템반도체는 스마트폰 성수기 진입으로 시스템온칩(SoC),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의 수요가 늘고, 글로벌 IT 제품과 TV 수요 증가에 따라 2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폴더블 스마트폰 수요도 예상을 크게 웃돌며 실적 향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인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는 해외 곳곳에서 사전예약 물량이 기대치를 뛰어넘으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삼성전자가 올해 700만 대 이상의 폴더블폰을 출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플레이와 가전 사업도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1조 원 가까이 늘며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4분기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실적이 3분기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월 D램과 낸드 가격은 보험세를 보인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D램 현물가격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메모리 반도체 '피크 아웃'(Peak Out·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4분기 들어 PC용 D램과 서버용 D램 수요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버용 D램의 경우엔 0~5% 수준 가격 하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트렌드포스를 비롯한 일부 증권가에선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반면,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최근 올해 메모리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을 기존 31.7%에서 37.1%로 상향 조정하는 등 낙관론도 여전하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피크 아웃 시점을 놓고 조사기관별로 각기 다르게 예측하면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사업에서는 경쟁심화가 우려된다. 애플은 오는 14일 신형 아이폰13 시리즈

를 공개하고, 제품 판매에 나선다. 샤오미도 이달 15일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4분기 들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효과가 감소하고, 경쟁사들이 앞다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3분기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가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3분기보다 2조 원 가량 높은 약 74조 원이다. 영업이익 역시 2000억 원가량 늘어난 15조66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연말 TV 등 가전제품 성수기 가전 부문과 디스플레이 부문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실적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D램 현물가 하락세와 말레이시아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메모리 업황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 최근 비메모리 공급 부족에 의한 판가 인상도 긍정적"이라며 "올해 출시한 폴더블폰 수요가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어 세트(스마트폰)와 부품(디스플레이, 반도체)의 조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GMTCK, 청라에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

길이 600m·4차선 도로 규모
긴급제동 등 테스트 환경 구축
'車 연구개발 역량 강화 시너지'



GMTCK 임직원들이 청라 주행사험장 능동 시험로 완공식에 참석해 시험 차량을 둘러보는 모습.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가 인천 청라 주행사험장 내 '능동 안전 주행사험로'를 완공했다. 글로벌 GM 연구소 가운데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GMTCK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한국지엠은 "GMTCK의 청라 주행사험장 내에 건설을 추진해온 능동 안전 시험로가 완공됐다"라며 "GM의 한국 내 연구 개발 법인으로서는 역량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청라 주행사험장에서 열린 완공식에는 '로베르토 램펠(Roberto Rempel)' GMTCK 사장을 비롯한 GM의 한국 사업장 임직원들이 참석, 완공을 축하하고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능동 안전 시험로는 길이 최대 600m와 폭 15m의 4개 차선 도로 규모다.

이곳에서는 △자동 긴급 제동 △후측방 자동 제동 △차선 유지 보조 등 신차 평가제도(NCAP)에 활용되는 시나리오에 맞춰 차량의 다양한 능동 안전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완공식에 참석한 로베르토 램펠 사장은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을 통해 청라 주행사험장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며, "쉐보레를 비롯한 GM 내 브랜드 제

품을 위한 능동 안전 기술 개발을 통해 GM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차량 개발 조직인 GMTCK 내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MTCK 청라 주행사험장은 이번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각종 건물 및 시험 주행로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 GM 내 GMTCK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GMTCK에는 현재 3000명 이상의 우수한 엔지니어가 20여 개의 글로벌 차량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청라 주행사험장 외에도 △디자인센터 △엔지니어링센터 △생산기술연구소 등 GM의 최첨단 글로벌 차량 개발을 위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GMTCK 청라 주행사험장은 총면적 약 61만㎡인 청라 프루빙그라운드 주행사험으로 이외에도 제동성능 시험실, 조정안정시험실, 구조 강성시험실, 환경 풍동시험실, 진동소음시험실 등 다양한 연구 시설이 자리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LG디스플레이-카카오, 스마트 주차장 구축 '맞손' LG디스플레이가 카카오톡과 손잡고 투명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로 스마트 주차장 구축에 나선다. 투명 올레드는 기존 유리창에 패널을 부착, 공간을 절약하면서, 유리가 마치 디스플레이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방문객들은 화면을 통해 카카오톡을 통해 브랜딩 영상을 활용한 환영 인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투명 올레드는 백라이트 없이 화소 스스로 빛을 내 투명도가 높으면서 얇고 가벼운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아이오닉5, 獨 전문지 전기차 평가 1위

BMW·아우디 제치고 '발전 가속·최고 속도' 부문 호평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독일 자동차 권위지의 비교 시승에서 BMW와 아우디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12일 현대차그룹의 미디어 채널인 HMG저널에 따르면 독일 '아웃도자이퉁'이 최근 실시한 전기차 3종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닉 5는 총점 326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비교평가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비롯해 BMW iX3와 아우디 e-트론 Q4 등 총 3차종이 경쟁을 벌였다.

아이오닉 5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BMW iX3(3187점)가 큰 점수 차이로 2위에 그쳤고, 아우디 e-트론 Q4는 3위(3149점)에 그쳤다.

무엇보다 아이오닉 5는 발전 가속과 최고 속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전 기술력도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제동성능을 비롯해 △중고차 잔존가치 △보종기간 △친환경적 분야에



현대차 아이오닉5. 신태현 기자 holjjak@

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웃도자이퉁은 "아이오닉 5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며 "초고속 충전기술과 긴 보증기간이 동급 모델 중 가장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2월 공개된 아이오닉 5는 현대차가 도전하는 첫 번째 전용 전기차다.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를 연상케 하는 상징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LG, 베트남 현지 채용 확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직 채용을 확대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 중이지만 세계 시장 곳곳에서 주력 제품이 판매가 확산 중인 만큼, 증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2일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박닌성 휴대전화 공장에서 일할 생산직 1000명을 채용한다.

배경은 역시 증산을 위해서다. 삼성전자 두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은 40여 국가에서 출시된 이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인도 등 20여 국가에서 완판이 이어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 하이퐁 공장에서 생산 직원 모집 공고를 냈다. LG는 현지에서 TV, 에어컨, 진공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등을 생산 중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두산인프라, 친환경 전자식 선박엔진 출시

현대중공업그룹건설기계부문 계열사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친환경 전자식 선박 엔진 DX12 모델을 전 세계 시장에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모델은 1만1100cc 엔진으로 최고출력 550마력을 낸다. 주로 어선 등 중소형 선박에 설치된다.

이번 제품은 연료를 고압으로 공급 및 분사하는 커먼레일 시스템을 갖춰 기존 기계식 엔진 대비 출력, 연료효율이 각각 10%, 5% 이상 향상된 점이 특징이다. 또 엔진 기관실이 협소한 중소형 선박 환경을 고려해 경쟁사 대비 엔진을 간결하게 설계해 공간 활용성도 높였다. 이번 신형 선박 엔진은 유해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고효율 선택적 환원 촉매(SCR) 기술을 적용해 선박에 적용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대기오염방지 3차 규제(Tier3)를 맞춘 친환경 엔진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선보이는 전자식 선박엔진 DX12(왼쪽)와 유해물질 배출 차단 기술이 적용된 SCR 머플러.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하반기 전자식 선박 엔진 DL06 모델(6000cc)과 DL08 모델(8000cc)도 출시해 선박 엔진 시장에서 첨단 전자식 엔진 제품군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임팩트 상무는 "이번 전자식 엔진 출시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친환경 기술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총천연색 가전·스마트폰 ‘색채 마케팅’ 가속

삼성전자, 색상 선택지 360종 마련
LG전자 13종 ‘오브제 컬렉션’ 선보
스마트폰 신제품 컬러 선택 폭 증가



아이폰12 출시 이후 7개월여 만인 올해 4월 추가된 ‘아이폰12 퍼플 컬러’. 사진제공 애플미디어

‘글램 썬 옐로우’, ‘코타 그리너리’, ‘미스트 그린’.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색채를 앞세운 경영 전략이 확산 중이다. 과거, 특정 색채를 보면 해당 브랜드가 떠올랐으나 이제 컬러 경영은 소비재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특정 색상만 봐도 단박에 해당 제품이 기억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은,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마케팅’으로 불린다. 전통적인 백색가전인 냉장고와 에어컨은 최근 몇 년 새 일제히 색옷을 입었다. ‘백(白)색가전’ 아닌 ‘백(百)색가전’으로의 변화다.

첨단 기능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으로 ‘디자인’이 떠오르며 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생산 혁신까지... ‘컬러 가전’의 세계=컬러 가전 유행 기점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비스포크(bespoke)’ 출시다. 첫 제품이었던 비스포크 냉장고가 출시될 당시, 백색가전의 대표 주자인 냉장고에 색을 입힌다는 발상에 업계 관심이 뜨거웠다.

당시 9가지에 불과했던 기본 패널 색상 수는 지난해 4월 15개, 올해 3월엔 22개까

를 모두 포괄한다는 콘셉트 하에 쿠키·식기세척기·슈드레서 등 17종, LG 오브제 컬렉션은 스타일러, 광파오븐 등을 더해 13종에 달한다.

◇스마트폰 시장서도 컬러 전쟁 치열=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컬러’가 판매량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스펙 경쟁’에 여념 없던 스마트폰 제조사도 부쩍 디자인에 힘을 바짝 주는 양상이다.

과거 서너 가지에 그쳤던 스마트폰 신제품 색상 선택 폭은, 최근 몇 년 새 6~7개까지 늘었다.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등 제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공통된 현상이다. 여기에 무선 이어폰,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도 연계성 있는 컬러 전략이 눈에 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성 고객을 사로잡으려는 가지각색 ‘색채마케팅’도 펼쳐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S20 FE(팬 에디션) 제품 개발 단계에서 1만 명이 넘는 삼성 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색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신제품 발매도 선호도 상위권을 기록한 색 위주로 이뤄졌다. 노우리 기자 we1228@

‘강판도 컬러 시대’ 색깔 어떻게 결정될까

동국제강, 3가지 컬러강판 디자인 콘셉트 제시

컬러강판 인기가 증가하면서 철강사들도 컬러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 가전, 건축자재에 들어가는 컬러강판은 열연강판에 표면처리를 해 색깔을 입힌 강판이다.

철강사들은 컬러강판 색깔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한다.

첫 번째는 가전업체 등 고객사들의 주문이다. 고객사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특정 색깔의 컬러강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철강사들이 이에 맞는 색깔을 고안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철강사들의 자체적인 판단이다. 한 해 디자인 트렌드를 고려해 색깔을 결정 후, 철강사들이 고객사에 디자인을 제시한다.

컬러 비즈니스에 신경을 많이 쓰는 철강사는 컬러강판 업계 1위인 동국

제강이다. 동국제강은 2019년부터 컬러강판 신제품 및 디자인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컬러강판 증설을 위해 250억 원을 투자해 최근 생산설비 증설을 마쳤다. 이번 증설로 동국제강 컬러강판 생산설비는 8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연간 컬러강판 생산량은 75만 톤에서 85만 톤으로 증가한다.

동국제강은 올해 건축용 컬러강판 브랜드인 렉스틸의 디자인 콘셉트로 ‘라이프(Life)’를 제시했다.

동국제강은 콘셉트를 제시하면서 신제품 디자인을 △하이 디지털(디지털 프린팅 컬러강판 제품 디자인에 초점) △터치드 스타(철강제품 본연의 아름다움 강조한 디자인) 세 가지 테마로 소개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지 늘어났다. 패널 소재와 색상, 문 개수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선택지의 수는 수천 가지를 넘어선다. 급격한 색상 폭 확장엔 출시 1년 만에 냉장고 판매량 비중 65%를 훌쩍 넘어서는 등 열렬한 고객 반응이 한몫했다.

올해에는 기본 패널 외에도 ‘나만의 색’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360개(프리즘 컬러)의 색상 선택지도 마련됐다.

글로벌 프리미엄 페인트 기업 ‘벤자민 무어(Benjamin Moore)’의 트렌드 색상을 지표로 삼아, 1차로 1360개까지 범위를 좁힌 다음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본 색채를 위주로 360개 색을 골라냈다.

LG전자의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 컬렉션’도 대표적인 컬러 가전이다. 지난해 출시 당시 13가지 색상으로 출발해, 올해 2가지 색(레드 우드·클레이 브라운)이 추가됐다.

색의 확장은 전통적인 백색가전에서 그치지 않고 신가전까지 광범위하게 퍼졌다. 현재 삼성전자 비스포크 시리즈는 집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네시스 GV80 ‘브런즈웍 그린’, 기아 K9 에스콧트 그린, 기아 K8 카디프 그린, 기아 스텔러 에스콧트 그린. 사진제공 제네시스/기아

車색상도 유행 탄다... 최신 트렌드는 ‘그린’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동차의 컬러는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한다.

먼저 차는 검정과 떼려야 뗄 수 없다. 타이어가 검정이고, 이른바 ‘틴팅’ 처리된 유리나 선루프 등이 모두 검정이다. 검정이 차지하는 면적과 얼마만큼 잘 어울리는지, 차 고유의 디자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차 가격과 주력 소비층, 그리고 이들이 선호하는 흐름도 따져야 한다. 소형차일수록 경쾌한 색감이 많고, 고급차일수록 채도가 높은 ‘무거운 컬러’가 많다.

같은 색이지만 차 디자인에 따라, 또 후처리 공정에 따라 다른 느낌을 전달하기도 한다. 한때 이런 자동차 색채에도 유행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수입차 시장이 확산하면서 은색이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이런 유행은 빠르게 등장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게 추세다.

결국, 특정 차종에 잘 어울리는 이른바 해당 차종과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상징) 컬러’가 시장에서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이 상징적 컬러 몇몇만 모이면 또 하나의 ‘유행’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최근 국산차 가운데 고급차를 중심으로 녹색 계열이 인기다. 특히 기아가 준대형 차급을 상대로 ‘그린(Green)’을 강조하고 있다.

기아는 ‘2022년형 스텔러’를 출시하면서 영국 에스콧트(Ascot) 경마장에서 착안한 신규 외장 색상 ‘에스콧트 그린’을 추가했다. 앞서 대형 세단 K9에도 쓰였던 고급스러운 녹색이다.

이밖에 두 가지 컬러를 하나의 자동차에 쓰이는 이른바 ‘투-톤 컬러’도 비용과 직결된다. 추가되는 페인트 비용 이외에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시간당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농협60주년
금융의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

NH농협금융

“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수익은 흔들리지 않도록
위험을 배운 포 베타
”

분산투자의 힘으로 시장을 이기는 EMP

ETF Managed Portfolio

전체 포트폴리오 중 절반 이상을 여러 종류의 ETF에 분산 투자합니다
시장이 불확실해질수록 EMP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3828(2021.08.10~2022.08.09) ※공통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통)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로보)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NH로보EMP자산배분의 투자자문보수 중 기본보수(연0.5%)는 분기단위 후취하며 만기 혹은 해지시 후취상수 합니다. ※(펀드)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펀드)증권거래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랩 계약의 수수료는 계약별로 상이합니다. *NH글로벌버스, NH글로벌인컴(연1.0%+성과보수 분기 후취)/NH글로벌채(연0.8%+성과보수 분기후취)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문화가 된다



NH투자증권

“모든 기업 무료로 쓰는 ‘이모티콘 플랫폼’ 서비스”

인터뷰

이재원 이모티박스 대표

이재원(사진) 이모티박스 대표이사는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써보자는 생각에서 창업을 결심했다. 서비스의 핵심은 모든 업체에서 무료로 도입 가능한 이모티콘 플랫폼 솔루션이다.

서비스의 핵심은 모든 업체에서 무료로 도입 가능한 이모티콘 플랫폼 솔루션이다.

이재원 대표의 창업 사례는 준비된 대학생의 좋은 예인 듯 했다. 어릴 적 꿈이 실제 직업(창업)으로 연결됐으며, 이 대표는 대학교 입학(소프트웨어학과) 초기부터 컨퍼런스, 동아리, 대회활동,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등을 통해 창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재원 대표는 12일 서울시 강남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모티콘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지하는 비

차세대 이모티콘 인프라 목표 작가들·SNS 업체 상생 구축 솔루션 공급... 수익도 재분배 “올해 50개 국내 업체와 제휴”

중을 나날이 키워온 가운데, 이모티콘 인프라는 카카오톡, 라인 등 극소수의 국내 대형 서비스에만 편중됐다”며 “이모티박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글로벌적으로 해결해 ‘차세대 통합 이모티콘 인프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이모티콘 시스템은 SNS업체가 자체적인 공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해야 했다. 국내 중소형 서비스 업체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이모티콘 작가라는 직업개념이 카카오톡과 라인이 분포된 국가에만 있다. 페이스북,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은 전부 무료 기반으로 상품화를 하고 있지 않다. 전문직업인 작가층이 거의 전



무하며, 콘텐츠의 질이 여타 산업에 비해서 뒤쳐져 왔다. 일부에선 콘텐츠 수급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대표는 작가들과 SNS 업체들 간 상부상조하는 모델로 이모티박스의 사업을 구축했다. 현재 사업에 이르게 된 동기 부여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서 터닝포인트를 얻었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

한민국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 창구로 꼽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그는 “이모티박스의 대표적인 2가지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은 업체측에 이모티콘 인프라 솔루션을 무료로 공급하고, 일부 수익 또한 재분배해드린다는 것”이라며 “이모티박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익화하는 B2B모델이 아닌, 실사용자인 유저

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B2B2C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특징은 특정 서비스 전용이 아닌 여러 서비스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모티박스 이모티콘을 한번 구매함으로써, 이모티박스의 모든 제휴서비스에서 구매한 콘텐츠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재이엔(인터넷방송), 티그리스(협업툴) 등 국내 업체들과 제휴가 된 상태다.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 왓츠앱 등의 글로벌 서비스에도 연동을 지원한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 50개 이상의 국내 서비스와 제휴를 할 예정이다. 제휴사가 많아질수록 가격 대비 이모티콘의 사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는 이모티박스와 이모티콘 작가들에게 유리한 성장이다.

이재원 대표는 “기존 제휴사들과의 도입과 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B2B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나아가 글로벌 업체들과의 제휴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

LG U+, 내년 전용회선에 ‘양자내성암호’ 도입

크립토패 개발 기술 상용화 퀀텀컴퓨터 시대 해킹 대비

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 전환에 속도를 올린다. 일상생활 속에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며 ‘퀀텀(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하겠단 구상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0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PQC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설명회는 암호기술 전문기업 ‘크립토패’도 함께했다. 크립토패는 천정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산업수학센터장)가 설립한 기업으로 PQC와 암호화된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동형암호 등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크립토패에 통신업계 최초로 지분투자를 단행하며 PQC 기술력을 확보한 바 있다.

양자컴퓨터는 양자 역학적인 물리현상을 활용해 계산하는 컴퓨터다. 일반 컴퓨터와 달리 0과 1을 공존시킬 수 있는 ‘큐비트’로 연산하며, 연산 속도도 올라간다. 일반 컴퓨터가 6만5536회 연산할 계산식을 양자컴퓨터로 계산한다면 한 번에 연산이 끝나는 식이다.

양자컴퓨터가 도래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암호 알고리즘이 단 몇 초만에 풀릴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 새로운 ‘방패’가 필요하다. 이중 하나가 PQC다.

PQC는 양자컴퓨터로 풀어내는데 수십 억년이 걸리는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다. 암호기 교환, 데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양자내성암호(PQC)로 보안을 강화한 안면인식서비스를 시험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이터 암·복호화, 무결성 인증 등 핵심 보안요소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 편리한 데다 확장성도 높다.

크립토패는 수학적 격자 문제를 기반으로 한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양자컴퓨터가 이를 푸는 데만 1000조 년 정도가 걸린다.

천정희 크립토패 대표는 “PQC는 물리적 장(양자컴퓨터)을 수학적 방패로 막는 것”이라며 “양자컴퓨터에 안전한 인증된 통신 채널은 PQC 알고리즘이 있으면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크립토패에서 개발한 PQC를 상용화하며 양자 시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상용화가 시작될 분야는 ‘전용회선’이다. 전용회선 서비스에 PQC를 도입해 정보를 암호화하면 공

신호를 추출해 암호를 탈취하는 해커들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기술을 점차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향후 금융거래나 생체 인증, 인터넷·5G 통신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늘린다.

구성철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은 “기술을 도입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암호 인증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PQC 기술을 상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재형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상무)은 “양자컴퓨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를 통해 통신인프라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포스트 퀀텀 트랜지션’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지역화폐 이상거래’ 블록체인·AI 통해 탐지

KT, 거래 데이터 모니터링

KT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고도화된 지역화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선보인다. 이상거래를 포착해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KT는 지역화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AI 기반으로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특징은 △머신러닝 기반 소비자들과 가맹점의 소비패턴 학습 △다

양한 패턴의 이상거래 조기 탐지 △지역화폐 유통과정 투명화 등이다.

KT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화폐의 이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해 고도화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스템은 관리자가 사전 정의한 규칙에 대해서만 탐지 및 통보되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화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지역화폐 거래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학습

한다. 미리 정의되지 않은 이상거래에 관해서도 탐지할 수 있게 했다.

KT 지역화폐 관리자는 이상거래 발생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상거래로 탐지되는 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KT의 담당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담당자는 이를 판단해 결재와 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임재환 KT AI·DX플랫폼사업본부장은 “블록체인, AI 등이 적용된 이번 지역화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지역화폐의 악의적 유통과 관련한 대응과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상반기〉 ‘창업성공패키지’ 참여 기업 매출액 1298억

중진공 “3311명 일자리 창출”

창업성공패키지가 올해 상반기 우수 스타트업 발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올해 창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1298억 원, 일자리 3311명 창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D.N.A 등 혁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1065개사는 상반기 매출액 1194억 원, 고용 3041명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는 지난 기수의 상반기 성과 대비 매출 26.8%, 고용 39.9% 향상된 수치다. 또 56개사가 총 89억 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8월 개교한 이후 올해 2기 입

교생을 모집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입교기업 60개사가 상반기에 104억 원 매출, 270명을 고용을 나타냈고 6개사가 총 11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지난해 입교기업이 글로벌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며 “올해도 글로벌 기업 수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창업기업 글로벌 시야 확장과 해외 조기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올해 특화분야 및 지원 대상을 인공지능(AI)에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를 추가한 D.N.A 전 분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입교자가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창업 사업과 지원을 통해 잠재력을 갖춘 창업자들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 kjm@

한일현대시멘트 친환경 설비 2년 후 완공

CO₂ 연 10만톤 감소 기대

한일현대시멘트가 영월공장 ECO 발전 설비 설치공사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회사와 업계에 따르면 한일현대시멘트는 올해 5월 폐열 발전 설비 전문 기술을 보유한 카와사키중공업과 ‘ECO 발전 설비’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상세 설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월공장 ECO 발전 설비 계획은 애초 2019년 6월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0년 1월 질소산화물 부과금 등 대기 관련 법규 개정과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ECO 발전 기술 간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진행 속도를 늦췄다.

아울러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현장 방문이 어려워 업무 협력이 지연됐다.

올해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설치 기업 계약과 상세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예상 투

자금은 700억 원이며 현재 75억 원을 투자한 상태다. 영월공장 ECO 발전 설비는 배열회수 보일러, 복수식 증기터빈,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열을 회수해 고효율 발전을 실시한다.

내부에선 시멘트 반제품인 클린커(Clinker) 소성을 위해 사용된 고온의 열(1450℃)중 남은 열(300-350℃)을 이용, 전기를 생산해 공장전력 대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월공장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30%(17.5MW)를 ECO 설비에서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화석연료 전력 사용 감축으로 인해 연간 약 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도 기대한다.

한일현대시멘트 관계자는 “이번 설비 투자는 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실질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 kjm@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희망그림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호 생명사랑파트너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은행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호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841개* 생명사랑홍보센터

자살예방체계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41개의 신한은행이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수 (2021년 8월 25일 기준)



13,673명* 생명지킴이

자살예방은 주변인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13,673명의 신한은행 전 직원이 생명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임직원 수 (2020년 말 경영공시 기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귀성보다 홈추가 대세... 추석 선물세트 매출 '깡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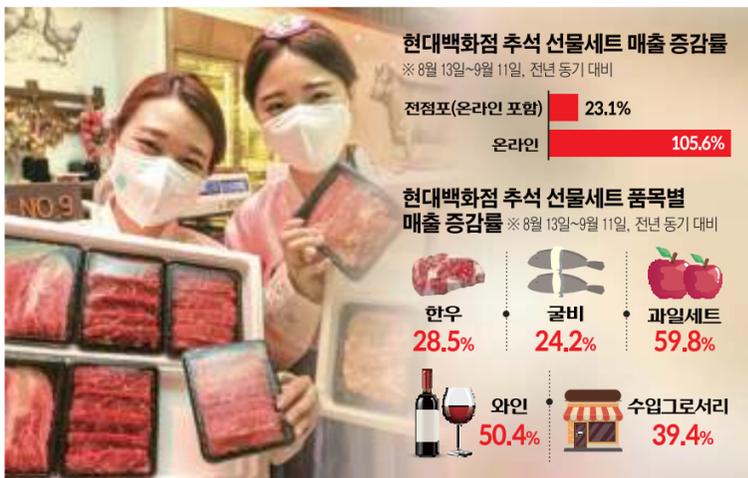
한우·굴비 프리미엄 상품 인기
'신선식품 구독권' 이색 선물도

현대백, 온라인 매출 106% 증가
롯데백, 사전예약 판매 50%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추석 연휴 기간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선물만 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마음에 선물 가격대가 높아지거나, 뻘한 선물보다는 그동안 명절 선물세트로 만나볼 수 없었던 희소성을 지닌 이색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전 점포와 온라인몰(더현대닷컴·현대H몰, 현대식품관 투움)에서 한 달여 간(8월 13일~9월 11일) 추석 선물세트 매출을 중간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23.1% 신장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고가 제품군의 매출 증가폭이 가파르다. 한우와 굴비 매출은 지난해보다 28.5%, 24.2% 늘었고, 100만 원 이상 초(超)프리미엄 한우 선물도 작년보다 80.5%나 더 팔렸다. 사인머스캣·애플망고 등 고가 과일 선물 매출은 59.8% 증가



했다. 와인과 수입 프리미엄 그로서리 선물세트 매출도 각각 50.4%, 39.4% 신장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구매도 크게 늘었다. 현대백화점의 올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105.6%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대백화점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대면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 매출도 치솟았

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50% 신장했고, 전체 추석 선물 매출 가운데 온라인 매출의 구성비도 4%P(포인트) 증가한 16%를 차지했다. 특히 축산 선물세트의 경우 50만 원 이상의 고가 상품의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이 88%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추석 대비 올해 품목 수를 2배로 늘리고, 과일 같은 전통적인 선물 외에도 이색 상품들을 준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선보이고 있다.

축산 선물 세트는 50만 원 이상 고가 상품 구성비를 40% 이상 늘렸다. 대표 품목은 '울릉침소 명품 세트(98만 원)'와 '제주 흑한우 명품 세트(92만 원)' 등이다. 와인 물량도 지난해 추석보다 40% 이상 더 확보했다.

소량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구독권 선물 세트'도 준비했다. 선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 없이, 받는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롯데백화점에 방문해 제품을 나누어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한우 세트 구독권(24만 원)'과 '푸드에비뉴 사과·배 혼합 세트 구독권(15만 원)', '로얄 활전복 세트 구독권(20만 원)' 등이다.

신세계도 올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고가 선물로 정성을 대신하는 수요를 감안해 프리미엄 상품을 전년보다 15% 확대했다.

명절 인기 품목인 한우는 유명 맛집과 협업한 선물 세트를 확대해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레이니'라는 닥네임으로 15년 이상 꾸준히 미식 블로그를 운영한 박찬익 대표의 철학과 신념이 담긴 청담동 대표 프리미엄 한우 맛집인 'R고기' 선물세트다. R고기 레이니 스페셜과 실속 있는 부위로만 구성된 R고기 레이니 컬렉션은 각

각 56만 원, 36만 원이다.

신세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레스케이프 호텔 연계 상품도 새롭게 출시했다. 펫 라이프스타일 상품인 '레스케이프 펫 스위트(420만 원)', '레스케이프 펫 소파(65만 원)'를 판매한다.

대형마트에서도 고가 제품이 잘 났다. 이마트에서는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양주세트가 전년 동기 대비 38%가량 신장했다. 이에 이마트는 올해 추석에 발렌타인 싱글몰트 12-15년산 3종, 탈리스커 10년, 싱글몰트, 발베니 26년, 짐빔 버번, 와일드 터키 버번 8년 등을 비롯해 약 200여종의 양주를 판매한다.

롯데마트도 7월 29일~8월 31일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기간 동안 '주류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190.6% 증가했다. 그중 '위스키 선물세트'는 157.6%, '와인 선물세트'는 210.6% 신장하며 전체 주류 선물세트 매출을 이끌었다. '싱글몰트 위스키 선물세트' 매출은 764.5%, '버번 위스키 선물세트'는 346.7% 증가했다.

이밖에도 롯데마트는 프리미엄 식재료 선물세트인 '돈조반니 올리브오일 앤 발사믹세트'와 이색 선물로 'SAFE LIFE 디자인 분말 소화기'를 내놨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아울렛 '디트로네 라운지' 첫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는 프리미엄 전동카 투어와 키즈메뉴가 특화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디트로네 라운지'를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타임빌라스의 시그니처 공간 '글라스빌' 내 10곳의 자연친화 독립형 매장 중 하나인 '디트로네 라운지'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동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리미엄 전동카 '디트로네'의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시승 후 구매할 수 있으며, 돈가스 와 고르곤졸라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갖춘 레스토랑도 운영한다. 사진제공 롯데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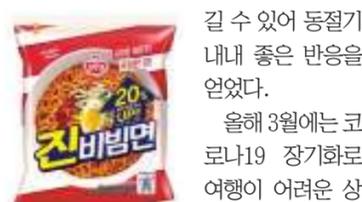
오뚜기 '진비빔면' 누적 판매 8000만개

오뚜기의 '진비빔면(사진)'이 계절면 시장에서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뚜기는 '진비빔면'이 기존 계절면과 차별성을 앞세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1년 5개월만에 누적판매량 8000만개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진비빔면'은 태양초의 매운맛에 사과와 타마린드 양념소스를 더해 새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특징이다. 쫄깃하고 찰진 면발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보강하고, 기존의 '오뚜기 메밀비빔면(130g)' 대비 중량을 20% 늘려 더욱 든든하게 즐길 수 있다. 실제로 '진비빔면'의 차별화 포인트로 회사 측은 △비빔면 한 개로는 부족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푸짐한 양 △'진비빔면'의 노하우를 담은 중독성 있는 매운맛 △농남아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향신료인 타마린드를 적용한 시원한 맛 등을 꼽았다.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도 판매 호조에 한 몫 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진비빔면 크리스마스 한정판'은 기존 제품에 동결 건조한 미역국 불룩을 추가한 것으로, 따뜻하고 고소한 미역국을 진비빔면과 함께 즐



길 수 있어 동절기 내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비빔면'의 모델인 백종원과 함께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TV CF를 내놨다. 6월부터는 '진비빔면 플렉스(FLEX)'를 콘셉트로, 시원하고 매콤한 비빔소스가 성게알, 참치회, 육회 등 기름진 재료와 잘 어울린다는 점을 TV CF와 이벤트를 통해 알리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차별화된 매운맛과 넉넉한 양을 자랑하는 '진비빔면'은 맛과 양을 다 잡았다는 소비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출시 초반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비빔면'만의 특징점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직무교육·마케팅·채용 설명회

'메타버스' 탑승한 유통가

메타버스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면서 유통업계도 메타버스 열풍에 뛰어들고 있다.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온라인상의 가상세계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실 세계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GS리테일은 미래 유통 혁신을 위한 신사업 및 서비스 아이디어를 공모 및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경험을 전달하는 신개념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 '2021 Future Commerce Hackathon'(이하 해커톤)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예선에는 37개팀 139명이 참여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 '퓨처 커머스 빌리지'를 만들어 그곳에서 각 팀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설명, 고객 인터뷰와 협업을 진행했다. 고객과 임원 심사를 통해 10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다양한 직무의 실무자들이 노코드 툴(코딩 없이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발자 도움없이 서비스 검증에 위한 시연 제품을 직접 만들고 고객에게 테스트했다.

지난달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한강공원 맵에 가상현실 편의점 CU제페토한강점을 오픈한

BGF리테일은 비대면 업무와 소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메타버스 게더타운에 가상현실 교육센터를 오픈해 임직원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BGF 가상현실 교육센터는 서울 해화동에 위치한 BGF교육연구센터를 실제와 똑같이 구현한 온라인 공간이다. 강의장과 카페테리아, 야외공간까지 그대로 옮겨와 임직원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제시한 롯데홈쇼핑은 자체 개발한 가상 모델 루시를 가상 쇼호스트로 발전시키는 등 메타버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6월 난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PB '하이메이드섬'을 오픈했고, 롯데푸드는 대학생 마케터 선발 면접을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진행했다.

한국 코카콜라는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메타버스를 택했다. 코카콜라 '게더타운'에 사용된 음료 페트병의 긍정적인 자원순환을 즐겁고 이색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코카-콜라 윈더플 아일랜드'를 최근 오픈했다. 7월부터 진행 중인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윈더플 캠페인' 시즌 2의 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다.

하이네켄코리아는 국내 외국계기업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비대면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남주현 기자 jooh@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외관 리뉴얼을 마친 갤러리아백화점 대전 타임월드(사진)가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타임월드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미국 IDEA,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제품 △콘셉트 등 3개 부문에서 디자인의 우수성·창의성·기능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와함께 타임월드는 글로벌 건축 관련 뉴스와 정보가 매달 1000만건 이상 교류되는 영국 대표 건축 매체인 WAN(World Architecture News)이 주최하는 어워드에서 파사드 부문 본상도 수상했다.

지난해 12월 약 1년간 외관 리뉴얼 공사를 마친 타임월드는 '어반 블룸(Urban Bloom)' 콘셉트로 자연을 모티브로 한 꽃의 군집 형태를 표현했다. 이를 위해 외관에 각기 다른 5700여 개 '꽃 모양 모듈'을 설치했으며, 각각의 꽃 모듈들은 야간에 중심부 조명을 밝혀 타임월드 외관 전체를 '화려한 빛의 미디어파사드 건축물'로 변신한다. 이로써 '도심 속 조각품'으로 거듭난 타임월드는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미적 건축물로 꼽히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붉은 규제’에 새파라진 홍콩증시... ELS 투자자 ‘패닉’

빅테크 규제에 홍콩지수 약세
연고점 대비 H지수 19.8% ↓
연동 ELS ‘상환 실패’ 잇따라
투자자들 ‘원금 날릴라’ 긴장



어 기초자산 2개 이상 ELS 중 홍콩H지수가 포함된 상품에선 유로스톡스50-홍콩H지수 ELS 2개, 홍콩H지수-코스피 200지수 ELS 1개가 상환됐다.

지난 5월부터 기초자산 1개로 이뤄진 지수형 ELS 상환 기록 중 홍콩H지수 기반 상품은 하나도 없었다.

ELS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이들의 가격을 통상 6개월마다 평가, 조건 만족 시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되는 상품이다. 가령 코스피200 지수가 6개월 후 최초 기준가의 95%, 12개월 후에는 90% 이상이면 수익과 함께 원금을 주고 조기 상환된다.

지난해부터 발행된 홍콩H지수 ELS의 1차 상환 기회가 5월이었는데, 지수가 급락하면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H지수는 지난 10일(현지시간) 9386.84 포인트 마감했다. 지난 2월 최고 1만2271.6 포인트까지 오른 것과 비교하면 19.8% 하락했다. 지난달 8월에는 8644.64포인트까지 떨어지며 고점 대비 29.5% 내리기도 했다. 덕분에 지난 1월에 발행된 홍콩H지수 관련 1조4800억 원 물량 중 약 8000억 원

가량이 조기상환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ELS 발행 잔고로 잠기는 셈이다.

9월 이후 ELS 조기 상환도 쉽지 않아 보인다. 2월 17일 연고 고점(1만2228.63)을 기록했을 정도로 홍콩H지수가 높아졌던 터라 조기 상환되려면 이 수준 대비 95%를 웃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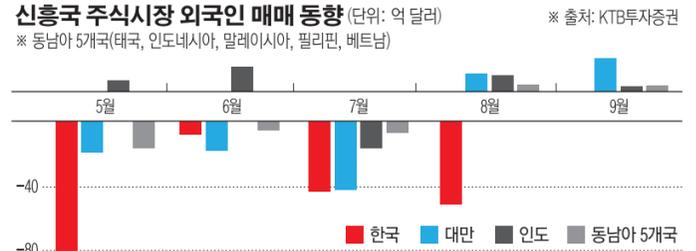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에 발행된 홍콩H지수 관련 ELS 중 1월 12일 이전 발행 물량은 대부분 조기 상환됐지만, 이후 발행된 물량의 조기 상환은 부진하다”며 “9월, 10월에도 홍콩H지수 관련 물량이 각각 2조400억 원, 3조1600억 원이 존재하는데 1만500포인트를 넘어 서야 조기상환 요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홍콩H지수 관련 물량은 시장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실장도 “E-LS 시장 대부분이 지수형 상품이다. 홍콩H지수가 무너지면 국내 지수형 ELS 수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홍콩H지수 사태를 떠올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당시 중국 정부의 ‘빚투(빚 내서 투자)’ 금지, 중국 경제 둔화 우려로 2015년 5월 1만5000선에 가까웠던 홍콩H지수는 불과 9개월 만인 2016년 2월 7500선까지 곤두박질치며 ELS 원금 손실이 속출했다.

하지만 통상 기준 가격(발행 가격) 대비 60%로 설정된 원금 손실 기준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원금과 수익은 지킬 수 있으므로 기다려 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인아 기자 ljh@



다시 ‘팔자’ 돌아선 외국인 매물 부담에 ‘박스피’ 예고

주간 증시 전망

글로벌 경기현황 지표 발표 호재보다 악재 많은 한 주

이번 주(13일~17일) 코스피지수는 지난주와 같이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박스피(코스피+박스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 등 여러 불확실성 등 겹칠 가능성도 있어 다음 주 증시는 호재보다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는 한주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산업생산(9월 15일), 소매판매(9월 16일), 소비자신뢰지수(9월 17일) 등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도 △15일 8월 산업생산지수, 유로존은 △17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발표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한 터라 이들 지표에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 등 공급 병목과 근로자 수 부족 등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여 증시에 부담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전화 통화를 가진 점은 갈등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주간 코스피는 3060~3200포인트(NH투자증권 예상)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어

떤 결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9월 FOMC 회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될 것”이라며 “국내외 경기순환이 정점 통과를 뚜렷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 부담이 낮아지지 않으면 연중 정책기조 변화 속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 둔화 가속과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물가 부담 안정세가 예상했던 것만큼 뚜렷해지지 않으면 국내 추석 연휴 기간에 예정된 9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다음 주 코스피 흐름에 있어 매물 부담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주목된다. 8월 말에서 9월 초 일시적으로 개선됐던 외국인 동향이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시장은 인터넷플랫폼 규제 이슈로 카카오와 네이버라는 대형 IT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국내 기업이익의 전망 역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외국인의 순매도 확대와 무역흑자 축소 등은 원화에 약세로 작용했다.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9월 원화는 달러화 가치와 연동돼 1150~1190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위드 코로나가 시화하고 미국의 재정정책 합의 등으로 경기 반등 기대가 확산할 것”이라며 “한국은행 역시 4분기 중 연내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돼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내년 3분기부터 ‘삼바 0.1주’ 살 수 있다

금융위, 해외株 올해·국내株 내년 하반기 소수 단위 거래 허용

내년 3분기부터는 9만2500원을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1주를 살 수 있게 된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 거래 최소 단위는 1주다. 원하는 액수만큼 주식을 매매할 수 없고, 주식 가격에 맞춰 1주 단위로 사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려면 최소 1주 가격인 92만5000원(5일 종가 기준)을 써야 한다. 소수점 매매는 이 거래 단위를 1주가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주식 수’가 아니라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3000~5000원으로도 1주당 100만 원이 넘는 LG생활건강의 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앞서 시장에 내놨다. 두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규모는 올 6월 말 기준 10억2000만 달러(약 1조1700억 원)로, 당국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국내에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면서 “업계 등 의견을 감안해 일정 기간 해당 서

비스를 먼저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수점 매매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증권거래와 계약결제 인프라 간 불일치 때문에 소수 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에 당국은 주식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계약결제원은 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자의 소수 단위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고, 계약결제원은 이 소수 단위 주식 총량을 전용계좌에 별도로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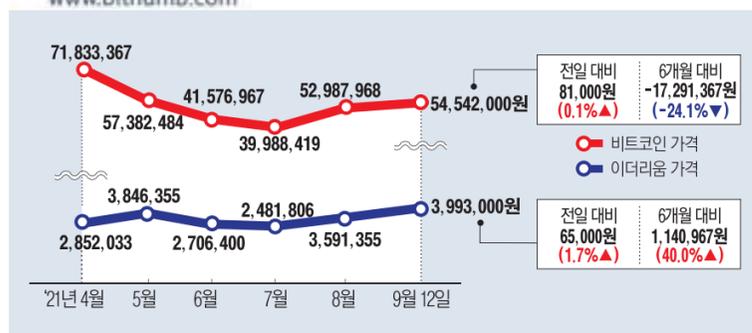
당국은 이런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는 올해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 증권사를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수단위 거래 허용에 따라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회사는 금액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빗썸 지수 (2021년 9월 12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761,000	-3,000 (0.4%▼)	이오스	5,630	-10 (0.2%▼)
리플	1,300	7 (0.5%▲)	트론	119	3 (2.6%▲)
라이트코인	214,700	2,800 (1.3%▲)	스텔라루멘	389	2 (0.5%▲)
에이다	3,109	180 (6.1%▲)	비트코인에스비	191,500	-800 (0.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빅테크 규제 우려 틈새... 네이버·카카오 시총 16兆 증발

“저가 매수 기회” 네·카 1.5兆 줍줍한 개미

빅테크 규제 우려에 맥을 못 추고 주저앉은 카카오 주식을 개미들이 1조원 넘게 끌어담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가 15.58% 하락한 3일간(8~10일) 개인 투자자는 카카오를 1조411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주가가 10.06% 급락한 8일 하루 개인 순매수액은 6262억 원으로 카카오의 개인 일일 순매수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8일부터 사흘간 7498억 원어치, 2929억 원어치 각각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낸 셈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7.76%)의 개인 순매수액도 4906억 원에 달해 카카오·네이버는 개인 순매수 금액 1·2위를 각각 차지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정조준한 규제 논의에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기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빅테크 업체에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지권의 압박도 거세다. 지난 7일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통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57조8000억원, 67조3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두 기업 모두 10일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규제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7일과 비교하면 시총 10조6000억원과 5조7000억원이 각각 증발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불장에 기름... '신규택지 지정' 화성·의왕 '부르는 게 값'

'택지개발+광역 교통망' 호재
의왕 과열조짐 호가 1억 켤층
대출규제에도 집값상승 불가피



경기 화성시와 의왕시 아파트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돈줄 옥죄기에도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가능성 등 개발 호재가 이 일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와 실거래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상승했다. 2012년 5월 주간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 무려 4주간 이어졌다.

상승세를 주도하는 곳은 주로 경기도 서남부 지역이다. 경기 화성시가 0.79%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오산·평택시가 나란히 0.76%씩 올랐다. 의왕시도 0.70% 뛰었다. 특히 화성시는 한 주 만에 상승폭이 0.12%포인트(P)나 확대됐다. 작년 3월 셋째 주(16일 기준-0.91%)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3주 연속 오름폭이 꺾이던 안산시도 이번 주 0.44%로 오름폭을 키웠다.

이 일대 집값이 들쭉날쭉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3차 신규택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기 의왕·군포·안산지구 일대에 4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이번 신규택지 발표의 골자였다. 수원역에서 약 5km 서쪽에 있는 미개발지역 화성봉담3지구에 1만7000가구(229만㎡규모)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화성시 봉담읍 봉담베스트빌 전용 84㎡형은 이달 7일 2억8000만 원에 팔렸다. 종전 신고가(5월·2억 원)보다 8000만 원 비

싼 가격이다. 올해 초 실거래가(1억3000만~1억8000만 원)와의 차이는 최고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연초 실거래가가 1억8000만 원을 밑돌던 신일우남클래식타운 전용 59㎡형도 이달 8일 3억 원에 팔렸다. 지난 7월 6억1800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은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의 동일면적 매물 호가는 최고 7억3000만 원에 달한다.

봉담읍 일대 A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는 지난 4월부터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호재로 집값이 많이 뛴 상황인데 이번 신규택지 지정까지 더해져 시세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의왕시 일대 주택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신규택지 조성에 GTX-C노선 신설까지 기정사실화 한 영향이다. 사실상 겹겹이 씌인다.

호가는 무섭게 치솟았다. 당초 10억 원에 매수자를 대기하던 의왕삼동파크푸르지오 전용 84㎡형 매물은 개발 호재가 전해진 뒤 호가가 11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인덕원 센트럴자이 동일면적 매물도 약 5000만 원 가량 호가가 올랐다. 의왕역 일대 B공인 관계자는 “거리는 뜸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매수자들의 전화 문의가 빗발쳤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풀기현상이 일어나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111.7에서 이번 주 112.1로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이 106.5→107.2, 경기는 114.0→114.1로 올랐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출을 바짝 조이고, 기준금리까지 올렸지만 이처럼 약발이 먹이지 않는 데에는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역교통망, 신도시 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 집값 상승이 현재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간의 급등세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장재현 리얼투제이 리서치 팀장은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탈서울 이주 수요가 늘고, 여기에 GTX와 택지 개발 기대감이 더해져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신규택지 입주까지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GTX 완공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외지인 몽칫돈 몰린 제주 아파트 매매·전세값 급등

제주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10년 새 최대폭으로 뛰는가 하면 올해 하반기 들어 10억 원을 훌쩍 넘긴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타 지역 거주자들이 아파트를 사들이는 원정 투자도 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제주 아파트 매매·전세값은 각각 0.49%·0.41% 올라 수도권을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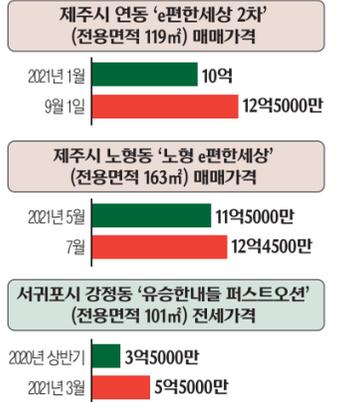
제주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이번 주까지 15.65% 올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0억 원을 웃도는 거래가 속속 이뤄지며 ‘10억 클럽’ 가입 아파트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e편한세상 2차’ 전용면적 119㎡형은 이달 1일 12억 5000만 원 거래대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1월만 해도 10억 원에 거래됐으나 8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현재 호가는 12억~13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제주시 노형동 ‘노형 e편한세상’ 전용 163㎡형은 7월 12억 45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5월 11억 5000만 원에 거래됐던 종전 최고가보다 95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현재 시세는 13억 원에 달한다.

노형동 A공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제주에서도 육지 집값과 ‘기 맞추기’하는 양상”이라며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매수에 가담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 부쩍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제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추이 (단위: 원)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세값까지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지난해 상반기 3억 5000만 원 수준이었던 서귀포시 강정동 ‘유승한내들 퍼스트오션’ 전용 101㎡형의 전세보증금은 3월 5억 5000만 원으로 1년 새 2억 원가량 올랐다.

제주 아파트값은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차이나 머니’ 유입이 시들해진 것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사실상 전국이 정부 규제의 사정권에 들면서 비규제지역인 제주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제주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기며 집값의 최고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3867가구 중 26.5% (1024가구)는 외지인이 샀다.

이동욱 기자 toto@

금주의 분양캘린더

9월 셋째 주엔 1만5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이 청약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19개 단지, 1만4467가구(일반분양 7857가구)가 청약시장에 공급된다.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프스

트’, 대구 중구 ‘힐스테이트 동인’,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부암 서히스타힐스’ 등이 청약을 받는다.

8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다. 충남 천안시 ‘다샵 천안레이크마크’, 대구 달서구 ‘달서 SKVIEW’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정당계약을 받는 단지는 8곳이다. 인천 계양구 ‘계양 서해그랑블 더테라스’, 경기

화성시 ‘힐스테이트 봉담프라이드시티’, 경남 양산시 ‘양산 코아루 에듀포레’ 등에서 이번 주 정당계약을 시작한다.

3개 단지는 17일 일제히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중흥S클래스(A4)’·‘오산세교2지구 중흥S클래스(A9)’, 대구 수성구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셀’ 등이 이날 견본주택 문을 열고 청약객을 맞는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리모델링 러시’ 분당, 주변 집값 들쭉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속속 가시화하면서 인근 아파트값도 들쭉이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아파트는 이르면 내년 주민주와 함께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된 한솔마을 5단지지는 기존 12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늘어나고 지하주차장도 새로 조성된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이다.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분은 115가구가 나올 계획으로 현재 시공사와 협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내년 중순 이주와 착공 등 남은 절차를 차레대로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 주택이 많은 분당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음에도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 용적률과 관련이 크다. 기존 단지의 용적률이 200% 이상이면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200%를 초과한다. 이 때문에 오히

려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는 기존 수직 증축에서 수평 및 별동 증축으로 설계를 변경해 올해 4월 리모델링 사업인가를 받았다.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와 ‘느티마을 4단지’는 7월 건축통합위원회의 건축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정자동 ‘한솔마을 6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매화마을 2단지’ 등도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이 순항하면서 집주인들은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를 높이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정자동 ‘로얄팰리스’ 전용면적 244㎡형의 현재 시세는 27억~28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1월 29억 4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져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가격 하락이 지속하면서 2018년 3월 13억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6월 20억 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30일 26억 7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학군이 탄탄하고 서울 강남과 인접해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13 (월)	접수	전북	강원	영월군	주천면	영월주천(국민임대) (~9/15)	9/15 (수)	접수	경기	평택시	이충동	고덕아펠리스써밋파크 ♣
			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9/15)	포천시	소흘읍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 2순위						
			군산시	내흥동	군산신역세권A3(국민임대) (~9/15)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한신더휴2차(공공분양) 2순위
	계약	경기	용인시	보정동	롯데캐슬하이브엘(민간임대) (~9/17)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부암서히스타힐스 1순위 (기타지역)		
			의왕시	내손동	테라팰리스의왕 ♣	대구		중구	동인동1가	힐스테이트동인 1순위 (기타지역)		
			화성시	봉담읍	힐스테이트봉담프라이드시티 (~9/19)	광양시		황금동	광양한라비발디센터레이크 1순위 (기타지역)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서해그랑블더테라스 (~9/16)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월드메르디앙구례 1순위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아시아드삼정그린코아더시티 (~9/15)		발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정산한울에이치밸리움
			경남	양산시	평산동	양산코아루에듀포레 (~9/15)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지정보타온리퍼밀리에(신촌희망타운)
			전남	보성군	문덕면	보성운곡귀농귀촌(국민임대) (~9/15)			인천	연수구	옥련동	KTX송도역서해그랑블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아시아드삼정그린코아더시티 ♣ (~9/15)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창역동원서해그랑블					
9/14 (화)	접수	경기	수원시	이의동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1순위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SKVIEW			
			시흥시	장곡동	시흥장현A3(공공분양) 1순위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2차			
			안양시	비산동	평촌엘프라우드 1순위 (당해지역)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SKVIEW테라스 ♣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3A17(공공분양) 1순위	인천	안양시	비산동	평촌엘프라우드 2순위			
			포천시	소흘읍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 1순위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북청라푸르지오트레시엘 ♣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한신더휴2차(공공분양) 1순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부암서히스타힐스 2순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부암서히스타힐스 1순위 (당해지역)	대구	중구	동인동1가	힐스테이트동인 2순위		
			대구	중구	동인동1가	힐스테이트동인 1순위 (당해지역)	광양시	황금동	광양한라비발디센터레이크 2순위			
			전남	광양시	황금동	광양한라비발디센터레이크 1순위 (당해지역)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월드메르디앙구례 2순위		
			9/15 (수)	발표	충남	천안시	직산읍	다샵천안레이크마크	9/16 (목)	접수	경기	전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자이										
수원시	이의동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2순위										
시흥시	장곡동	시흥장현A3(공공분양) 2순위										
9/15 (수)	접수	경기	장현동	시흥장현A6(국민임대) (~9/17)	9/17 (금)	오픈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지구중흥S클래스(A4)		
			안양시	비산동				평촌엘프라우드 1순위 (기타지역)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지구중흥S클래스(A9)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3A17(공공분양) 2순위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셀
			전남	금천면				빛가람코오롱하늘채 2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REPS

아쉬세븐 자금조달 위법성 여부 관건... 혐의 입증 땀 중형

방문판매법 위반·사기 의혹... 피해규모 등도 영향 미칠 듯
무기징역 가능성 낮지만 '특경법상 사기 혐의' 양형 높아

유사수신·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자금조달 방식, 수익구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추산되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쉬세븐은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금조달 방식을 비롯

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지, 구조상 이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일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과 회사 측 주장은 엇갈리는 상태다. 투자자들은 수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원금보장 등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분배했다는 취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금 조달, 수익 창출과 약정, 이익 지급 구조 등이 관

건"이라며 "유사수신 사기 범행의 경우 대부분 받은 돈 일부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돼 이익 창출이 되겠지만 미미할 것이고 결국 받은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처음부터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언제 얼마 수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다 사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주범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지만 최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양형을 높이고 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 3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했다. 현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지 2인자 강태용에게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강 씨는 조 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대

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았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최심만 법무법인 송경 대표변호사는 "이득액이 수천억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고 법원 경향이 양형 세계 나온다"며 "피해 금액, 사기 수법,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변제 규모, 혐의 인정 여부 등이 영향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구제이 수습기자 sunrise@



“미리 성묘 왔어요” 추석을 앞둔 12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하고 있다. 인천가족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묘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전 시설을 폐쇄한다. 뉴스시스

“외국서 수련한 치과의, 전문의 자격 있다”

법원, 복지부 상대 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 무효소송 원고 패소 판결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뒤 외국 의료기관,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준 보건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료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외국 수련자)는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을 두

지 않은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이 개정돼 2018년도 자격시험부터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수련자의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을 위한 검증절차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맡겼다. 치협으로부터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받은 외국 수련자가 재검정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는 회의를 열고 이들 중 일부를 '응시자격 있음'으로 변경해 승인했다. A 씨 등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합해보면 보건복지

부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 수련경력 인정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라며 “치협 등이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의견을 참조해 적절한 결론을 내기 위함이지 그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처분에 앞서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 중 인정기관을 미리 고시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논의 끝에 ‘출입국 기록 등 주관적 사정이 아닌 수료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수련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고 수련경력을 인정한 것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판단 여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교통공사 ‘파업 D-1’ 서울 지하철 결국 멈추나

서울 지하철 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노사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서울시 입장도 달라 남은 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시점을 14일로 결정하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9일 사 측과 대화를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 측은 실질적인 구조조정안에 변화된 입장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사와 노조는 ‘구조조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사는 ‘1조 원’ 적자

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후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운송 수입마저 감소했다. 공사는 해결책으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공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등 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5년간 2720명 의원면직 “조직문화 개선 필요”

한 해 544명 짐싼 서울시 공무원

▶1면서 계속

과도한 의전 문화는 물론 만연한 남성중심주의 문화가 비근한 사례다. 여기에 하향식 의사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 자치구에서 3년간 일했다는 A 씨는 “하루는 구의원이 구청에 온다고 이유로 대정소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군대에서 ‘스타’가 오면 하지 않는 청소를 하듯 구의원 방문 일정에 맞춰 구석구석을 정비했다”며 “상대할 민원인도 많은데 평소 안 하는 일까지 도맡다 보니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도 ‘차 준비’를 여전히 여성 공무원에게 맡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직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손님을 맞이할 때 보통 가장 최근 입사한 직원이 다과를 준비한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와 서울시 부서에서는 소위 ‘막내’가 있어도 여성 공무원이 차와 과일을 내오는 경우가 있다. 남성중심문화가 팽배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업무 보람도 느끼기 어렵다. 10여 년간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B 씨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도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 잊어진다”고 비판했다.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서울시(본청)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 7.03점을 받았다.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업무 지시(7.23점) 및 조직문화(7.2점) 점수가 낮았고, 인사 항목은 5.99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부당한 인사와 업무지시를 받아도 신고할 방법이 없고, 부서장이 업무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7년 소속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인사제도 개선 △업무부담 완화 △직원 사기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시행과제를 발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 등도 추진했다. 공무원 ‘탈조직’ 현상이 서울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본청과 자치구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 수가 4만여 명에 이른 만큼 조직을 떠난 공무원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직 공무원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C 공무원은 “일이 터지면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평가나 교육을 시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평생직장을 놔두고 이직을 염두에 두는 젊은 공무원이 많다”며 “문제를 찾고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징역 살고도 성충동약물치료 거부 대법 “치료 필요성 다시 심사해야”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내려진 뒤 집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 석방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성충동약물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치료 명령 집행을 거부했고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19년 7월 형이 종료됐으나 A 씨는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므로 약물치료 필요성이 없으니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며 다시 성충동약물치료를 거부해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치료 명령 집행 시점에 집행 필요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행 시점에 당시 집행을 필요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BEYOND GOLF



현존 드라이버 사상 최대사이즈의 스위트팟 영역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C.O.R 0.87 이상의 고반발 드라이버 기준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스윙 2,000번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사이즈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세계 최대의 페이스/스위트팟 넓이를 통해 임팩트시 빗맞아도 최대한 똑바로 가는 타구를 제공
- 아마추어 골퍼의 약점인 슬라이스와 훅이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다
- 총중량 223g-255g의 최경량 수준으로 가볍고 편해서 다루기가 매우 쉬우며 부담감이 없다. 스윙스피드가 빨라져 더 긴 비거리가 나간다.
- 비온드 센터 방문시 PGA프로들이 사용하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실내 분석 시스템으로 고객의 스윙을 정밀 분석 / 비거리에 초점을 둔 1:1 원포인트 레슨 제공
- 런을 극도로 많이 나오게 하는 비온드만의 I.M.T(Impact Maximum Technology)구조로 최대한 스프링을 억제하여 착지 후 다량의 런 발생으로 비거리 상승 효과
- 근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니어층에게 비거리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를 극한까지 높인 새로운 성능의 차세대 고반발 드라이버



기존 고반발 클럽보다 더 나간다

비온드는 비거리로 증명합니다

www.beyondgolf.co.kr

비온드 센터 방문시 반드시 고객님의 클럽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드의 "특별한 비거리"를 실감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비거리가 나오는 클럽과 비교하면서 시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이 '비온드'쪽이 더 긴 비거리와 늘어난 런이 나온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특금법 후 문닫는 거래소, 사기죄 적용 어려울 것”

‘가상화폐 형사소송 전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기죄 성립하려면 ‘기망’ 의도 있어야 하는데 증명 쉽지 않아 손실 회피 위해 가상화폐 현금화·메이저 코인 전환 고려 필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더 큰 액수를 돌려주겠다는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거래소에서 직접 생성해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방법이 등장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로 가상화폐 관련 형사소송 전문가인 신동협(사진)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7년만 해도 투자 사기 사건이 많았다”면서 “지금 은 특별한 경향 없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선물거래로 큰 이익을 얻은 투자자가 이를 현금화하려

고 하자 거래소 차원에서 이를 막은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거래소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투자를 중계한 사람이나 한국 측 대리인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안전망이 없는 취약한 것임을 다시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가상화폐 사기 유형으로 거래소의 ‘먹튀 사기’를 꼽았다. 신 변호사는 “일부 중소 거래소에서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를 받아 거래량과 가격을 올린 후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판매해 차익을 실현하고 잠적했다”면서 “운영자 3명 중 2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거래소는



투자자의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가상화폐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법적 안전망이 미흡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는 “유망하다는 가상화폐 투자 기회가 생겼다면 ‘왜 이런 행운이 나에게 오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을 제한된다. 요건을 맞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줄 폐쇄가 예상돼 투자자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쇄된 거래소를 상대로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금법 시행으로 투자금을 크게 잃는 것을 막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메이저 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19세’ 라두카누, US오픈 테니스 우승



19세 신예 에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동갑내기 레일라 페르난데스(73위·캐나다)를 2-0(6-4 6-3)으로 물리친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2002년 11월생으로 만 18세 10개월인 라두카누는 이날 페르난데스와의 ‘10대 대결’에서 승리하며 생애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뉴욕/AP연합뉴스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에 2년 연속 여성감독 작품 선정



11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오드리 디완(사진) 감독의 ‘레벤느랑(L’evenement)’이 경쟁 부문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노마드랜드(Nomadland)’의 클로이 자오 감독에 이어 2년 연속 여성 감독의 작품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레벤느랑(영어 제목은 ‘HAPPENING·해프닝’)은 낙태가 불법이던 1963년 프랑스에서 의도치 않은 임신 한 여대생 안느가 절망 상태에 빠져 낙태를 결심하기까지의 모습을 차분히 쫓는 내용이다. 여성만이 고통을 겪어지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봉준호 감독은 “심사위원단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은사자상(심사위원대상)에는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신의 손(THE HAND OF GOD)’이 선정됐다. 또 다른 은사자상(감독상)은 ‘더 파워 오브 더 도그(The Power of The Dog)’의 제인 캠피온 감독이 받았다. 이외에 심사위원특별상은 미켈란젤로 프람마르티노 감독의 ‘일 부코(il Buco)’에 돌아갔다.

배수경 기자 sue6870@·사진 EPA연합뉴스

중 규제에 사라졌던 마윈, 농장시찰 포착

4개월여 만에 온라인에 사진 돌아... ‘농업기술 진출 암시’

중국 정부의 규제 속에 자취를 감췄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최근 농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각에선 마윈이 농업기술 분야에 진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마윈이 지난 1일 저장성 핑후의 한 농장 텃밭에서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마윈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4개월여 만에, 알리바바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도일보는 “마윈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여러 축사를 단숨에 시찰한 후 직원들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다”며 “앞으로 그가 농업기술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윈이 2019년 한 포럼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농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던 일화를 소개했다.

마윈은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한 금융 포럼에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알리바바가 3조 원



에 달하는 중국 사상 최대 벌금 폭탄을 맞은 데 이어 계열사 엔트그룹은 상장이 무기한 연기된 후 당국의 지시에 따라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 중이다. 마윈 자신도 5월 당국의 압박 속에 자신이 설립한 대학 총장직서 물러난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인류 미래 정상회담 제안

“새로운 국제협약의 형성·살 만한 지구 만들기” 위해 행동 필요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인류 미래를 논의할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 창설 75주년을 맞아 유엔총회 주문으로 마련됐다.

구테흐스 총장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의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새로운

국제협약을 형성하고,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상회담을 열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바다부터 우주까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평화와 국제보건, ‘살 만한 지구’ 등 공동의 열망을 실현하려면 바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들을 논의할 정상회담을 2년 내 열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 서에서 유엔 사무총장과 경제사회이사회,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기구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국제경제’를 논의하는 정상회담을 격년으로 열자고도 제안했다. 전 세계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플랫폼은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이인아 기자 ljh@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승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영민
- ◆교육부 ◇명예퇴직 △일반기계연구원 이기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신동협
- ◆행정안전부 ◇과장급 △차세대지방재정세입 정보화추진단장 송경주 △대통령기록관장 심성보 ◇과장급 △국제협력담당관 유지선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승진 △재생에너지정책관 최진혁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승렬 △신통상질서정책관 김성열
- ◆보건복지부 ◇실·과장급 △글로벌백신허브추진단장 파견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 이원익 △연금정책과장 정호원 △보건산업정책과장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정은영
-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송홍석 ◇과장급 전보

- △직업능력정책과장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 양성필 △공공노사정책관 이상복
- ◆국토교통부 ◇과장급 승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규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박건수 ◇과장급 전보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최일락 ◇과장급 전보 △북합도시정책과장 최신행 △교통정책총괄과장 김경희 △항공정책과장 박지홍 ◇부이사관 승진 △주택정책과장 장우철 △건설정책과장 김근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박명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장 박병석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장 윤상훈 △항로표지과장 정준호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조경원 △상생협력정책관 정기환 △읍무즈만지원단장 엄진업 ◇과장급 승진 △비대면경제과장 이상진 △통계분석과장 강호정 △기술보호과장 노진상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상창 △기획총괄과장 조희수 △정책총괄과장 김지현 △일자리정책과장 이동원 △국제협력

- 과장 안태용 △창업정책총괄과장 김주하 △창업생태계조성과장 이종택 △기술정책과장 윤세명 △기술개발과장 윤석배 △울산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남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열수
-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의료기기연구단장 김석주 △기획조정본부장 진병문 △경영지원본부장 조현길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연구본부장 하태영 △공공기반연구본부장 황동욱 △기획부장 송민수 △행정부장 김대영 △의료수학연구센터장 안치영 △부산의료수학센터장 윤강준
- ◆한겨레 △오피니언부장 최성진(편집국 에디터부문) △콘텐츠키획부 엔터팀장 남지은(“ 디지털미디어부문) △종합편집부 편집3팀장 이재만(“ 에디터부문) △사진부 디지털사진팀장 이정아 △사회부 이슈팀장 이승준 △정치부 통일외교팀장 권혁철(이상 “ 이슈부문) △전국부 전국팀장 하여영 △토요판부 토요판팀장 신소운 △한겨레21부 취재1팀장 엄지원(이상 “ 정책기획부)

부음

페루 반군 ‘빛나는 길’ 구스만 옥중 사망

페루의 좌익 게릴라 조직인 ‘빛나는 길’의 창설자인 아베마엘 구스만이 86세를 일기로 옥중에서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스만은 1992년 경찰에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해군기지 내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구스만은 마오주의(마오쩌둥 사상)를 기치로 반체제 단체 ‘빛나는 길’을 창설해 농촌지역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정부 전복에 나선 ‘빛나는 길’은 군과 경찰,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 등 무장 공격을 일삼아 1980~1990년대에 페루를 뒤흔들었다. 그는 체포될 때까지 1만여 명의 무장 전사로 구성된 ‘빛나는 길’ 게릴라 군대를 지휘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7만명에 달하는 페루 내전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이

- ▲김상덕 씨 별세, 김운학(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씨 부친상 = 12일, 서울산보림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장지 국립영천호국원, 052-255-7114
- ▲최영자 씨 별세, 윤종덕(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중수(LG생활건강 HDB, SCM 팀장)·은주 씨 모친상, 강선옥·최라윤(유니버설 발레 아카데미) 씨 시모상, 공희택(전 워커힐, SK네트웍스 본부장) 씨 장모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13일 오후 19호실로 변경 예정), 발인 14일 오전 10시30분, 02-3410-6906
- ▲유중순 씨 별세, 이우중(경기아트센터 사장)·우성 씨 모친상, 심성지 씨 시모상 = 12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2-860-3500
- ▲신경숙 씨 별세, 이두희(청주 이즈치과 원장) 씨 모친상 = 12일, 청주 효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43-221-400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일본 아오야마학원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2030 청년들이 단기 거주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민간 임대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연령대가 좀 더 높고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은 서민들을 위한 60㎡ 초과 주택의 분양 공급에 집중하자. 시장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이 잘 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분적으로 유지하지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임대사업자 제도하에서 '영끌바잉'을 주도했던 세대는 20~30대 청년층이다. 대다수의 2030 청년들은 소득이 크지 않은 지금은 작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한다. 특히 과거의 청년층은 청약 가점이라든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전월세를 살면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30평대의 내 집 마련을 준비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재의

2030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주택이라도 전세를 끼고 사 놓으라 부추겼다. 이는 풍부했던 시장 유동성과 맞물려 집값을 상승시켰고,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패닉 바잉'까지 연출했다. 그리고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2030 청년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갔다.

예당초 2030 청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을지언정 보유하고 싶지는 않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보유세 혜택을 주고, 전월세 가격을 묶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일단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비슷한 다른 주택에도 안정적인 전월세 가격에 신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현재의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 가점을 쌓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세금을 절약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아이들이 성장하여 30평대 집이 필요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면 굳

이 지금 선취매에 나설 이유가 없다.

공급 측면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도는 쓰임새가 많다. 2030 청년들은 교통이 잘 발달한 도심이나 역세권에서 살고자 한다.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할 경우, 소형 임대주택을 일정비용 이상 의무로 짓도록 하여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져가서 운영한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큰 부담이 되고,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더디게 만든다. LH에 임대주택 운영을 맡기지 말고,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도록 하자. 취득세·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10년간 임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매도를 원할 경우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하자. 재건축 조합은 임대주택 물량도 분양할 수 있어 재건축 비용을 덜 수 있다. 재건축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일 여지도 생긴다. 주택의 질적 측면에서도 경쟁을 통해 관리되는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보다 우월하다.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심이나 역세권의 더 좋은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2030 청년들이 단기 거주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민간 임대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연령대가 좀 더 높고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은 서민들을 위한 60㎡ 초과 주택의 분양 공급에 집중하자. 시장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이 잘 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여야 한다.

올해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 이후 2030 청년층의 분노에 놀란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을 외치고 있다. 특히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누구나집 등등 다양하게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청년주택을 싼값에 분양하겠다고 한다. 그런 주택을 분양받으면 청약 가점이나 생애 첫 주택 혜택도 없어지고, 각종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어렵다. 자신이 당선되면 공공을 앞세워 세금으로 뭉개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민간 부문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방로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다 따라와. 고기 먹게." 라이벌인 강력반 회식에 끼워주겠다는 제안에 자존심으로 주춤하던 마약반 형사들이, "소고기야"라는 한마디에 바로 따라붙는다. 한 코미디 영화에서 초반에 '뺨 터지는' 장면이다. 이 영화는 범죄 수사로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는 통닭이 더 인기를 얻었다. 우리의 일상이 공감받은 썸이다.

광주의 초등학교에서는 채식 선택 급식이 운영되었다. 10% 수준의 참여 속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건강한 식습관, 기후위기 대응 등의 취지로 추진된 시범사업에 식생활 교육, 학생과 학부모들의 식단 참여도 이루어졌다.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학생식당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축은 인간이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1만여 년 전부터 제의에 희생물로 기르다 농사에 가축의 힘을 보태고 그 부

산물로 두엄을 만들어 토양에 유기비료를 더하는 데 활용되었다. 농업에 축산이 포함되는 이유도 오랫동안 논·밭농사와 가축사육이 순환관계를 이루며 생산력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폭탄 제조에 쓰인 암모니아 합성공정으로 화학비료를 대거 생산하고 투입하여 곡물 생산의 획기적인 증가를 이룬 이후 잉여 곡물을 원조물자화하거나 가축에게 먹이면서 축산은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상업용 공장식 축산이 이루어지며 육류 소비가 늘고, 곡물 사료가 마블링이 생기고, 분뇨는 미처 다 흡수로 순환되지 못하고 폐기물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고기와 부산물을 먹기 위한 상업적인 축산은 1960년대 경제성장을 하면서부터이다.

1970년대를 거치며 전 세계에서 사육하는 소는 10억 마리를 넘었고, 최근에는 13억~15억 마리를 헤아린다. 인도 등을 제외하면 육류·가공품을 먹기 위해 사육되는 소만 10억 마리에 이르고, 비슷한 수의 돼지와 양, 200억 마리의 닭 등 가축들이 먹는 사료의 양은 전 세계 곡물 소비의 40%

고기가 주식이라고?

에 이른다.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되는 양까지 제하면 78억 인구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은 곡물을 가축에게 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육류소비량은 1980년 11.3kg에서 2018년에는 53.9kg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용육류 공급량은 연평균 5% 증가해 2018년에는 1인당 68kg에 이른다. 곡물과 쌀 소비는 꾸준히 줄어들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9년 60kg 아래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일반 가구에서 1인당 57.7kg으로 줄었다. 고기가 주식이라 해도 될 수준이다.

소고기가 든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한 사람이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목욕하는 물을 쓰는 것과 같으며 육가공, 유제품 생산에 쓰이는 물은 지구상 깨끗한 물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구 표면 45%를 가축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막화 된 토지 3분의 1이 가축에 의해 초래된다는 다큐멘터리 보고도 있다.

소고기 1kg 생산에 10kg가량의 사료곡물이 투입되는데, 국내 음식료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곡물 가운데 70% 이상은 사료로 활용되고, 국내 배합사료

의 9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동향에 따라 2008년의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의 재현을 경계하고 있다.

소를 대표로 하는 축산에서는 장내발효(트림과 방귀)와 분뇨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지수가 20배나 높은 메탄이 발생하여, 국내 보고에서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16.5%에 달하며, 특히 육류제품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은 61%가 넘는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모든 교통수단에서 비롯되는 양이 13%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육식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지금과 같은 방식, 수준으로 육식이 증가하고 이어가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가축들이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육식의 정점을 찍고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안도 다다오(安藤忠雄) 명언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일본의 건축가. 건축을 독학한 그는 물과 빛·노출 콘크리트의 건축가로 불린다. '완벽한 기하학 구조가 절묘하게 자연과 어울리는 평온하고 명상적인 공간을 창조해냈다'는 평을 듣는다. 제주 섭지코지 '글라스 하우스', 강원도 원주의 '뮤지엄 산'이 그의 작품. 오늘은 그의 생일. 1941~.

☆ 고사성어 / 준조절충(樽俎折衝)
'술통과 안주를 놓은 상에서 적의 창끝을 꺾는다'라는 말. 제(濟)나라 경공(景公)과 진나라(秦) 평공(平公)이 여흥으로 투호(投壺) 놀이 중에 진의 신하가 '우리 주상이 맞으면 제후의 주장이 될 징조'라고 했다. 평공이 맞지자 수행한 제나라 안영(晏嬰)이 "우리 주군이 맞으면 제나라는 진나라에 대신해 흥하리라"고 했다. 경공도 맞지자 불쾌해하는 평공에게 그가 "투호는 하나의 놀이일 뿐이지 맹약은 아닙니다"라며 복잡한 국제외교 문제를 슬기롭게 넘긴 데서 유래했다. 출전 안자춘추(晏子春秋).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인 엔씨소프트가 3년 만에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엔씨소프트가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신작 모바일게임 '블레이드앤소울2'의 흥행 부진에 급격한 주가를 부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블소2의 흥행 부진에 이어 대표적인 히트작인 '리니지2M'의 하향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자사주 매입'이란 승부수가 시장에 통하지 않고 있다. 2월 100만 원을 웃돌던 주가는 60만7000원까지 주저앉았다. 통상 "저점 매수 기회"라고 외치는 증권사들까지 엔씨소프트의 신작 '리니지W'에 대한 기대를 낮게 전망하며 잇따라 주식 '매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유 있는 추

기자수첩



조성진 | 자본시장부/csjin2002@

엔씨 자사주 매입 '손바닥으로 태양 가리기'

락일 게다.

엔씨소프트는 다른 국내 게임회사에 비해서도 강력한 과금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돈을 쓰면 쓸수록 캐릭터가 강해지는 '페이투윈(Pay to Win)' 요소가 강하다.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M, 리니지2M

등이 단적인 예다. '클래스 뽑기', '아가시온 뽑기' 등 아이템을 '뽑기' 형태로 판매한다. 로또처럼 대박 아이템이 나올 수도, 별 가치가 없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유저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엔씨소프트의 게임에 돈을 쏟아붓게

한다. 엔씨소프트는 블소2 출시 전 "리니지처럼 클래스 뽑기, 아가시온 뽑기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6일 공개한 게임에서는 '클래스', '아가시온' 뽑기 방식에서 이름만 바꿨다. 이를 확인한 유저들이 등을 돌렸다.

유저들 입장에서 월 1만 원 수준으로 구독형 클라우드 게임을 모바일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굳이 엔씨소프트 게임에서 고액의 현금을 결제하며 아이템 뽑기에 매진할 필요가 없다.

엔씨소프트는 자사주 매입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유저의 마음을 돌려놔야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상식 / 믹트(MIKT)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지칭하는 '브릭스(BRICs)'란 용어를 만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짐 오닐 회장이 쓴 용어. 그는 멕시코(Mexico)와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Turkey) 4개국의 머리글자를 따 이렇게 지칭했다.

☆ 우리말 유래 / 가을
'벼 가을', '보릿가을', '밀 가을'처럼 본래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일을 뜻하는 말이 수확하는 계절이란 '가을철'을 뜻하게 되었다.

☆ 유머 / 스님의 결단
스님들이 책임자 선정 문제로 며칠째 난상토론을 벌였다. 결론이 나지 않자 한 스님이 고뇌에 찬 표정으로 던진 결단의 한마디. "걱정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드물듯, 역대 대통령 중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재임 기간의 비리 등으로 퇴임 후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인간 됨됨이와 성과를 따로 떼놓고 본다면 다들 나름대로 결과물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대통령들이 남긴 족적을 성과나 업적으로 불지조차 각자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

우선 업적이 없는 것만 같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남겼다. 이승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미 동맹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의 큰 틀을 구축했다는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이 잇을 만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침략전쟁조약"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며 철폐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효과만큼은 확실해보인다.

역대 대통령 중 호불호의 끝판왕이라 불려도 좋을 박정희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여러 성과를 냈다. 정경유착, 노동탄압 등 비난받을 이유가 모 든 업적을 다 덮고도 남을 지경이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이 차관 제공 중단까지 경고하며 반대하던 중화학 공업화 선언으로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제조업 강국의 뜻을 윤택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전 전 대통령은 2차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물가안정에 성공했으며, 노 전 대

데스크칼럼

정 일 환
정치경제부 부장



령은 1차 신도시 개발로 대표되는 주택 100만 호 공급 정책을 통해 폭등하던 집값을 잡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전격 실행,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탈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면 애매해진다. 사상 최대 경수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졌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박 전 대통령의 성과라고 하기는 어색하다. 베트남 등 10개가 넘는 나라들과 FTA가 체결됐지만, 업적이라 감탄하기에는 2%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시중에 떠도는 유머는 문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다, 둘째, 부동산으로 많은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물론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들의 불공정한 비아냥이다.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도 첫손에 꼽을 성과를 말하기가 망설여진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검찰개

혁, 코로나19 방역 등 정치·사회적 사안들이 있지만 성과인지 실책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판정이 내려질 것 같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한국판 뉴딜 등을 시도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 스스로는 K-방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종종 자랑거리로 삼는다. 하지만 일찌감치 백신을 확보해 상용에 나섰던 나라들과 규제 일변도의 K-방역을 비교하는 것은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률 역시 굳이 OECD로 비교 대상을 한정 짓는 이유가 순수한지 의문이 든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저개발국가일 것이라는 선입견에 기반 통계는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대만의 경우 국경을 봉쇄하고도 상반기 성장률 8%를 달성했다. 좁은 국토에 2300만 명이나 모여 사는 이 나라의 하루 확진자는 10명을 넘지 않는다.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들을 생각해 줬으면 한다. 그래야 박 전 대통령만큼이나 어려운 장점 찾기가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다.

서민들의 삶은 사방이 초상집이라는 뜻으로 변질된 '사면초가'라는 신조어가 들린다. 동서남북이 자영업자들의 곡소리, 무주택자들의 비명, 신혼부부들의 흐느낌, 취준생들의 한숨으로 가득하다는 의미다.

whan@

사설

뜯어고쳐야 할 게 분양가상한제뿐이 아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의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으로 인한 애로가 크다는 업계 견이에 이들 규제의 완화를 시사한 점에서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더해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 이내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고분양가심사제도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여야 분양가 아파트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핵심 수단들이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도입된 강력한 규제인데, 처음부터 역풍이 예고됐었다. 인위적 가격통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를 불러와 집값·전셋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로또 아파트' 투기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많았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시행됐다가 이런 문제점들로 2015년 사실상 폐지됐는데, 2019년 11월 다시 도입되면서 민간아파트에 까지 적용했다. 그 결과가 집값 폭등임을 지금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분양가 규제 조항을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재

개발단지들의 사업 중단이 속출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분양에 차질을 빚어 공급 불확실성을 높였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민간분양 물량은 3만7000여 가구로 작년보다 14% 이상 줄었고, 서울의 경우 '분양 가뭄' 상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금융기관들의 잇단 대출 규제, 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계속 커지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실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수요와 가격을 전방위로 억누르는 정책기조 변화에 한계가 예상된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국토부 입장과, 주택정책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시장의 괴리가 너무 뚜렷하다. 땀질 수준의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말고도 뜯어 고쳐야 할 규제는 많다. 단기적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시장 정상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수요 있는 곳의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푸는 조치와 함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리앉히는 일이 급선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 규제, 시장현실을 무시한 임대차 3법 등 그동안 수없이 쏟아낸 반(反)시장 제도들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고



이 장 옥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

데이터경제 시대 산업보안

통상 지능정보화사회의 3대 요소로 꼽히는 것이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인데, 이 중에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부른다. 많은 기업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해오던 핵심 정보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렇듯 데이터 환경의 급변에 따라 업종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체 기술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자체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경쟁당당하게 경쟁에 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도 상당수의 기업들은 경쟁업체가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담겨진 데이터를 손쉽게 취득하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다. 산업스파이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가 가히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마디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보안상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보의 열람부터 복제, 활용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가 경쟁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을 통해 훨씬 더 값진 정보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업체의 심층적인 경영정보까지도 파악해낼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하는 산업스파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허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신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물리적인 침투 및 탈취는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그 대신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매수, 공모를 통해 내부유출을 이끌어내는 식의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게다가 정보의 디지털화는 국부(國富)의 해외유출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데이터의 이동에 있어 과거와 같은 시간·공간적 제한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국가들은 데이터 보안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자. 국내 기술의 최대 유출처인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국의 데이터 안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왔다. 그 결과 2016년 '네트워크안전법'에 이어 금년에는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들의 내용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입법자나 정부당국자도 이

제 디지털 데이터의 허점을 악용한 산업보안범죄를 억제·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보다 심도 깊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데이터의 해외유출을 통해 손쉽게 '한탕'을 노리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범행유구를 억제하기에 현행 법령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의 해외유출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유출자의 입장에서는 해외유출 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국내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 범행 유혹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유출자에 대한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범행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재범 방지도 어려우므로 해외 유출에 한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특단의 강도 높은 규제가 요구된다.

둘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에는 고의 이외에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고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산업기술보호법의 해외유출 범죄조항에서 '목적'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내부자에게 있어 디지털 데이터는 종이문건과 같은 유형의 자료에 비해 무단 수집·이용·유통이 자유롭고 외부로의 유출도 훨씬 용이하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에 '데이터에 대한 부정 사용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제재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19 4차 유행 고용 영향은

이번 주에는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고용 관련 통계와 수입물가 지표가 나온다.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월)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7월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439만 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8만5000명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 들어 최고치의 증가폭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 고용 충격이 후행 지표인 7월 고용보험 행정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8월부터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15일(수)엔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7월 취업자 수는 276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000명 늘어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월(65만 2000명) 이후 5월(61만9000명)과 6월(58만2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둔화하고 있으나 3월(31만4000명)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또한 8월부터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음식·숙박업과 도소

매업 등 자영업 밀집 업종에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화) '8월 수출입물가지수'를 공개하는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속에서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가 또 올랐을지 주목된다. 앞서 7월의 경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119.73·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가 6월(115.88)보다 3.3% 올라 2014년 4월(120.89) 후 7년 3개월 내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같은 날 오후 한은은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올린 8월 26일 금통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날 금통위의 결정이 6명 위원들의 만장일치였는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올 해안에 10월과 11월 두 차례 있을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할지도 엿볼 수 있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Discover your world The all-new Sportage

궁금한 그곳으로, 나를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과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17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2.5m/ℓ (도심연비: 11.5km/ℓ, 고속도로연비: 13.8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29kg | 복합CO2배출량 139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18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2.3m/ℓ (도심연비: 11.3km/ℓ, 고속도로연비: 13.6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55kg | 복합CO2배출량 136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7단 DCT: 복합연비 12.1m/ℓ (도심연비: 11.0km/ℓ, 고속도로연비: 13.3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45kg | 복합CO2배출량 139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19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7단 DCT: 복합연비 12.1m/ℓ (도심연비: 11.0km/ℓ, 고속도로연비: 13.3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55kg | 복합CO2배출량 138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19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2.0m/ℓ (도심연비: 11.0km/ℓ, 고속도로연비: 13.3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45kg | 복합CO2배출량 145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8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1.8m/ℓ (도심연비: 10.9km/ℓ, 고속도로연비: 13.0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49g | 복합CO2배출량 142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7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1.6m/ℓ (도심연비: 10.7km/ℓ, 고속도로연비: 12.9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85kg | 복합CO2배출량 145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8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1.3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2.5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15kg | 복합CO2배출량 149g/km - 4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7단 DCT: 복합연비 11.1m/ℓ (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2.1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15kg | 복합CO2배출량 151g/km - 4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9인치 타이어 7단 DCT: 복합연비 11.1m/ℓ (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2.1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05kg | 복합CO2배출량 152g/km - 4등급 >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19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7단 DCT: 복합연비 10.8m/ℓ (도심연비: 9.8km/ℓ, 고속도로연비: 12.2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05kg | 복합CO2배출량 156g/km - 4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2WD 17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4.6m/ℓ (도심연비: 13.4km/ℓ, 고속도로연비: 16.2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15kg | 복합CO2배출량 130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2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4.0m/ℓ (도심연비: 12.5km/ℓ, 고속도로연비: 16.2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45kg | 복합CO2배출량 136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2WD 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8단: 복합연비 13.9m/ℓ (도심연비: 12.5km/ℓ, 고속도로연비: 16.0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45kg | 복합CO2배출량 137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2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4.1m/ℓ (도심연비: 12.7km/ℓ, 고속도로연비: 16.2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35kg | 복합CO2배출량 135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2WD 19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8단: 복합연비 13.9m/ℓ (도심연비: 12.5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35kg | 복합CO2배출량 137g/km - 2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7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3.1m/ℓ (도심연비: 11.9km/ℓ, 고속도로연비: 14.7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685kg | 복합CO2배출량 146g/km - 3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2.8m/ℓ (도심연비: 11.7km/ℓ, 고속도로연비: 14.3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15kg | 복합CO2배출량 150g/km - 3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8단: 복합연비 12.7m/ℓ (도심연비: 11.6km/ℓ, 고속도로연비: 14.2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15kg | 복합CO2배출량 151g/km - 3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연비 12.9m/ℓ (도심연비: 11.9km/ℓ, 고속도로연비: 14.3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05kg | 복합CO2배출량 149g/km - 3등급 > 스포티지 2.0 디젤 4WD 19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8단: 복합연비 12.6m/ℓ (도심연비: 11.5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05kg | 복합CO2배출량 152g/km - 3등급 >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17/18인치 타이어 자동 6단: 복합연비 16.7m/ℓ (도심연비: 15.9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25kg | 복합CO2배출량 96g/km - 1등급 >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17/18인치 타이어 (일트인 쉐) 자동 6단: 복합연비 16.3m/ℓ (도심연비: 16.6km/ℓ, 고속도로연비: 15.8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25kg | 복합CO2배출량 99g/km - 1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옵션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